

Global Market Report

2016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와 시사점



목 차

요 약

I. 국민투표 실시 배경 및 결과 / 1

- 1 1. 실시배경
- 5 2. EU 정상회의 주요 합의사항
- 6 3. 국민투표 결과
- 9 4. 영국과 EU 주요국 반응

II. 영국에 미치는 영향 / 21

- 21 1. 투표 직후 주요 경제지표 동향
- 22 2. 경제분야
- 34 3. 정치분야
- 38 4. 사회분야

III.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 / 40

IV. 한-영 관계에 미치는 영향 / 45

V. 브렉시트 관련 설문조사 / 49

- 49 1. 유럽 현지 제조업기업 바이어 대상 설문조사
- 51 2. 유럽 진출 우리기업 지상사 대상 설문조사
- 54 3. 영국 진출 우리기업 대상 설문조사

VI. 시사점 및 우리기업과 정부의 대응방안 / 57

요약

1. 국민투표 실시 배경 및 결과

- (실시배경) EU내 영국의 낮은 위상, EU로 이양된 주권 증가, 과도한 EU 분담금, 역내 무역적자 심화 등의 이유로 EU회의론과 탈퇴 주장 지속 제기
- (EU 정상회의 주요 합의내용) i) 비유로존 국가 차별 및 국제금융펀드 재정 분담 금지, ii) 신규 이주민 복지혜택 제한 및 예외적인 경우 긴급조치 시행, iii) 회원국 의회의 거부 시스템 및 '더욱 긴밀한 공동체 조향'의 영국 적용 배제, iv) 불필요한 규제 폐지
- (국민투표 결과) 51.9%로 브렉시트 가결됨으로써 EU 역사상 첫 회원국 탈퇴
- (주요국 반응) EU에 경제적 타격은 적으나, EU의 정치적 단결 저해 및 타 회원국 추가 이탈 우려

2. 영국에 미치는 영향

- (경제) 경제개방도 감소, 시장 불확실성 및 금융 변동성 확대 등으로 경제 위축 전망
 - 파운드화 약세 및 관세 상승으로 수출 감소, 투자유치 감소, 노동력 축소로 EU 잔류시보다 GDP는 최대 7.7% 하락, 실업률은 최대 2.6% 상승 전망
 - 국제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에 심각한 타격 예상, EU-미국 TTIP 체결을 앞두고 미국과의 관계 재정립 필요, 단, 대중무역 관련 무역제재 자율성 확대
- (정치) EU 탈퇴를 통해 독자적 정책 결정권 갖게 되어 국경통제강화 등 다양한 변화 추진 예상, EU잔류를 희망해온 스코틀랜드의 독립재추진 가능
- (사회) 이민자 복지혜택 감소, 난민문제 강경대응과 국경통제 강화 예상

3.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

- (무역) EU와의 FTA 당사국들 對영 관세 상승으로 수출 애로, 글로벌 교역 위축 전망
- (투자) 파운드화 약세와 EU시장 불안으로 영국 및 EU로부터 자금 유출, 글로벌 투자위축 초래

4. 한-영 관계에 미치는 영향

- 우리기업은 파운드화 평가절하에 따른 수익성 악화, 관세 상승으로 가격 경쟁력 저하를 예상하며, 양국간 무역 및 투자 위축 가능

5. 브렉시트 관련 설문조사

- (현지기업) 단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전망되며 對영 교역규모 축소 예정
- (우리기업) 브렉시트 이후 추이를 살펴보며 영국에서 사업 지속할 것으로 응답

6. 시사점 및 우리기업과 정부의 대응방안

- (英경제 불확실성 증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투자자금 이탈에 대비
- (영-EU 교역감소) 한-EU FTA 효과 상실로 인한 관세인상 등 부정적 영향 대비
- (FTA 재협상) 한-EU FTA 재협상 및 영국과 양자 FTA 체결 조속 추진
- (EU 회의론 확산) EU탈퇴 확산 및 글로벌 시장 불안정화 가능성에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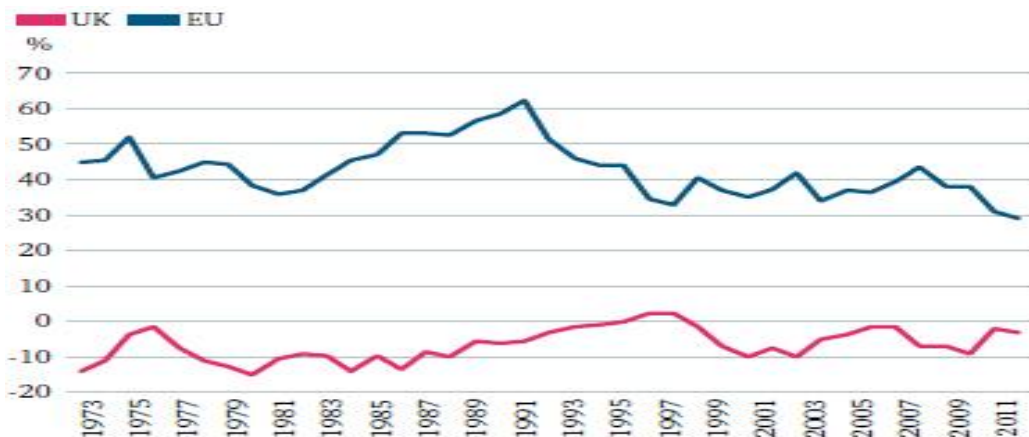


국민투표 실시 배경 및 결과

1. 실시배경

- 유럽의 재정위기를 계기로 촉발된 영국의 EU탈퇴(Brexit) 여론은 캐머런 총리가 2015년 5월 총선 공약으로 재집권시 EU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2017년 말까지 실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공론화
 - * 브렉시트(Brexit)는 Britain과 Exit의 합성어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의미
- 영국은 유럽경제공동체(EEC)에 가입한 1973년 이후 회원국 지위에 대한 국민들의 선호가 지속적으로 EU평균에 크게 못 미치고 있음.
 - 특히, 최근의 경기침체와 이민자 증가문제로 인해 보수당 내에서도 EU탈퇴에 대한 주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
 - * 영국은 1973년 EEC 가입 2년 만인 1975년에도 EEC탈퇴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해 67%의 지지로 잔류한 바 있음.

<EU회원국 지위에 대한 선호도 추이>



주) 산출방식 : 'good'응답자 비율 - 'bad'응답자 비율
 자료원 : Eurobarometer

- EU 회의론이 부상하는 주요 이유는 1) EU내 영국의 낮은 위상, 2) 국경통제권을 포함하여 EU로 지나치게 이양된 주권, 3) 과도한 EU 분담금 부과, 4) 역내 무역적자 심화 등이 있음.
- 2015년 총선에서 보수당이 과반수 의석(50.8%)을 차지하면서 재집권에 성공하였으며 브렉시트 논의도 본격화

- 2015년 11월 10일 캐머런 총리는 도날드 투스크(Donald Tusk) EU정상회의 상임의장에게 보낸 공식서한을 통해 EU잔류를 위한 영국 측의 4가지 요구조건을 EU측에 제시
 - 요구조건은 1) 이민자 복지혜택 제한, 2) 영국 의회의 자주권 강화, 3) EU규제에 대한 영국의 선택권 부여, 4) 비유로존 국가의 유로존 시장 접근 보장
 - * 영국은 유로화가 아닌 파운드화(£)를 독자적으로 사용 중
- 캐머런이 제시한 EU잔류 협상의 핵심은 이주자에 대한 자국의 국경통제권 강화 및 이주자 근로복지혜택 제한에 있음.
 - 영국은 2차 대전 이후 지금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민을 책임지는 전방위 무상복지를 펼치고 있는데, EU역내 거주와 노동의 자유 때문에 동유럽 등지에서 영국으로 집중되는 이민자들을 제한할 권한이 없음.

<영국 국가보험 수혜 이민자 출신국 상위 5개('16.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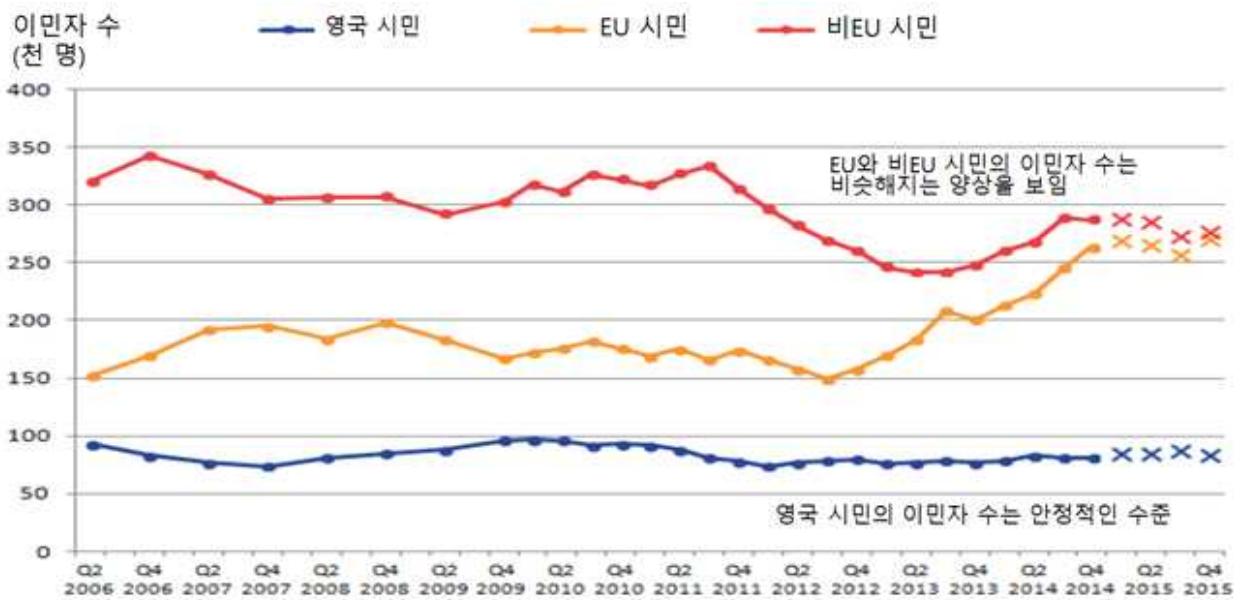
EU 국가	국가보험 등록건수	非EU 국가	국가보험 등록건수
루마니아	179,000	인도	34,000
폴란드	109,000	호주	14,000
이탈리아	57,000	중국	13,000
스페인	48,000	파키스탄	12,000
불가리아	40,000	나이지리아	10,000
EU합계	630,000	非EU합계	195,000
총계		826,000	

자료원 : 영국 통계청

- 이 때문에 영국정부는 역내 이주자들이 영국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노동력으로 일자리를 차지하고, 영국의 무상교육, 무상의료 등 사회 복지혜택을 누리고 있어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주장
- 역외 이주자들에 대해서는 영국정부가 이미 강력한 이민억제 정책을 통해 외국인 이민자 유입을 제한하고 있음.
- 영국통계청(ONS : Office of National Statistics)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재정위기 이후 역외 이주자들에 비해 역내 이주자 유입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최근 유럽의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함께 취업 목적의 이민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영국 국민들의 불만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
- 2015년 영국으로 유입된 순이민자는 33만 명으로 추산되며, 영국 옥스퍼드 대학 이민 연구소(Migration Observatory)에서 '16년 1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영국내 이주자 비율이 13.1%로 나타남.
- * 역내 이민자는 2004년 폴란드, 헝가리 등 동유럽 국가들이 EU에 신규 가입한 직후에도 급격히 증가한 바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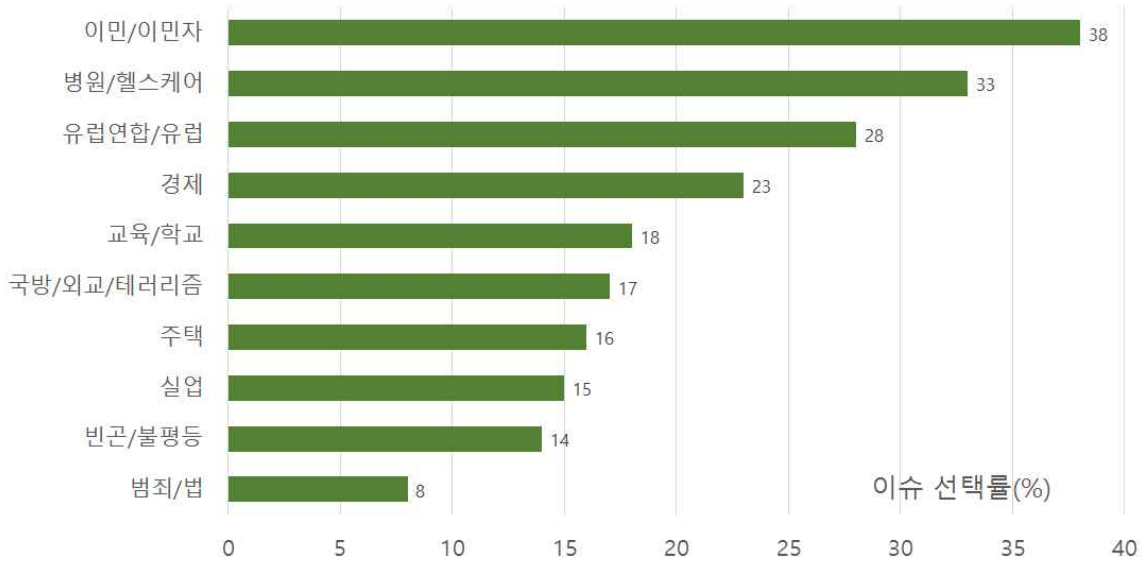
<2006-2015년 영국 이민자수 증감 추이>



자료원 : 영국통계청(ONS)

- 영국의 조사기관인 Ipsos MORI의 2016년 5월 여론조사에서도 영국민들은 이민 및 이민자 문제를 현재 영국이 직면한 최대 문제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영국민들이 생각하는 영국이 직면한 주요 이슈들 >



자료원 : Ipsos MORI

- 2015년 말 시리아 등으로부터의 난민유입이 심각해지고 파리 총격테러의 주범이 난민 지위를 이용해 유럽으로 유입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민자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브렉시트 찬성 여론 부상
- 영국의 EU탈퇴에 대한 우려가 가속화되면서 2016년 2월 2일 EU 상임의장은 EU회원국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EU단결이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며 사실상 영국 측 요구안을 대폭 수용하는 EU측의 제안을 제시
- 2016년 2월 18-19일 2일 간 브뤼셀에서 개최된 EU회원국 정상회의에서 영국 측 요구조건이 대부분 수용
- 이에 따라 캐머런 총리는 6월 23일 브렉시트 찬·반 국민투표 실시를 공식 발표하면서 “영국의 미래를 위해 EU 잔류에 투표해 줄 것”을 국민들에게 호소
- * 영국 선거법은 국민투표 실시를 위해 최소 16주의 공고 기간을 두고 있음.
- 2016년 4월 15일부로 브렉시트 국민투표 공식캠페인이 시작되었으며 ‘Vote Leave’ 이라는 탈퇴 캠프와 ‘Britain Stronger in Europe’이라는 잔류캠프가 각 700만 파운드의 예산으로 선거운동 돌입

2. EU 정상회의 주요 합의사항(2016년 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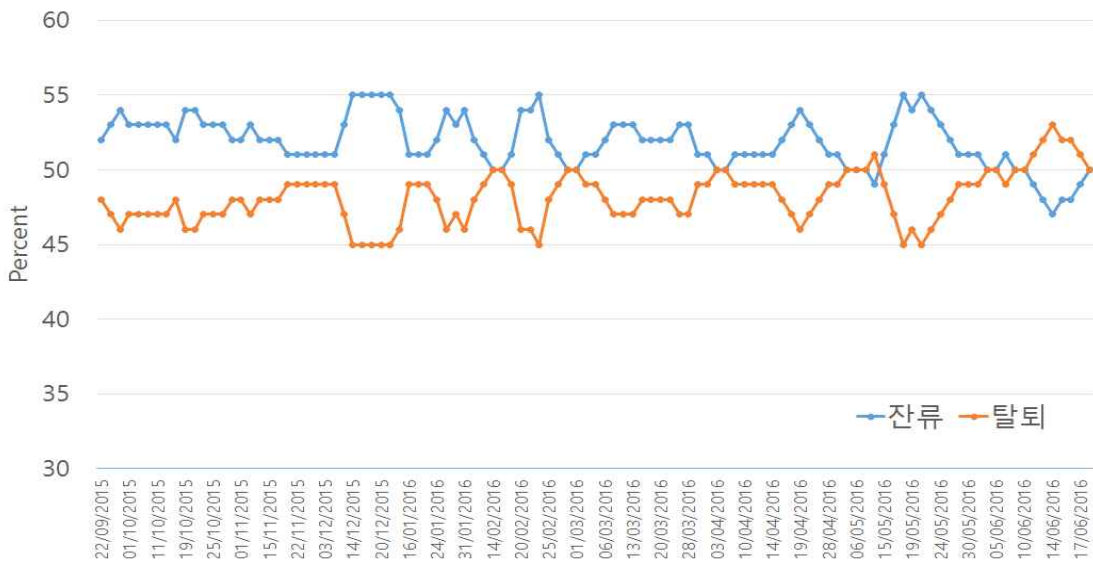
- 경제 지배구조(Economic Governance)
 - 역내 유로존 및 非유로존 회원국 간 객관적 근거 없는 차별 금지 및 차별 인식 시 이에 대한 이의 제기
 - 유럽 중앙은행(ECB : European Central Bank)의 규제는 유로화 사용 국가의 금융기관에만 적용
 - 유로존 긴급금융안정조치 발동시 비유로존 회원국에 재정 부담 요구금지
- 기업의 경쟁력 강화(Competitiveness)
 - 규제 검토 메커니즘(burden review mechanism)을 도입하여 규제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 마련
 - 기업(특히 중소기업)의 행정 및 규제 이행 부담 경감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 폐지
- 복지혜택 및 자유이동 제한(Social Benefit and Free Movement)
 - 역내 이주자 자녀의 양육수당(child benefits)은 자녀가 거주하는 국가의 생계비 수준과 연계하여 산정하되, 신규 이주민에 대해서만 적용, 2020년 1월 1일부터 기존 이주자에게도 확대 시행 가능
 - 공공서비스 운영에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자국 고용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긴급조치(emergency brake) 가능
 - 긴급조치 승인 시, 역내 이민자에 대한 근로복지혜택을 입국 시부터 최대 7년 이내 취업 시부터 최장 4년간 제한 가능
 - 영국은 이미 긴급조치 승인 조건을 충분히 갖춘 것으로 합의되어 국민 투표 결과 EU 잔류가 결정되었으므로 즉시 발동 가능
- 자치권 강화(Sovereignty)
 - '더욱 긴밀한 공동체(ever-closer-union)' 조항의 영국 적용 제외 및 차기 조약 개정 시 동 내용 명시화. 이로써 영국은 EU의 정치적 통합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 마련
 - 회원국 의회 거부시스템(Red Card)을 도입하여, 회원국 의회의 55% 이상의 요구로 EU 입법 거부 시 입법 절차가 중단되고, 이들 의회의 요구를 반영한 후 입법 절차 속개

3. 국민투표 결과

○ 사전 여론조사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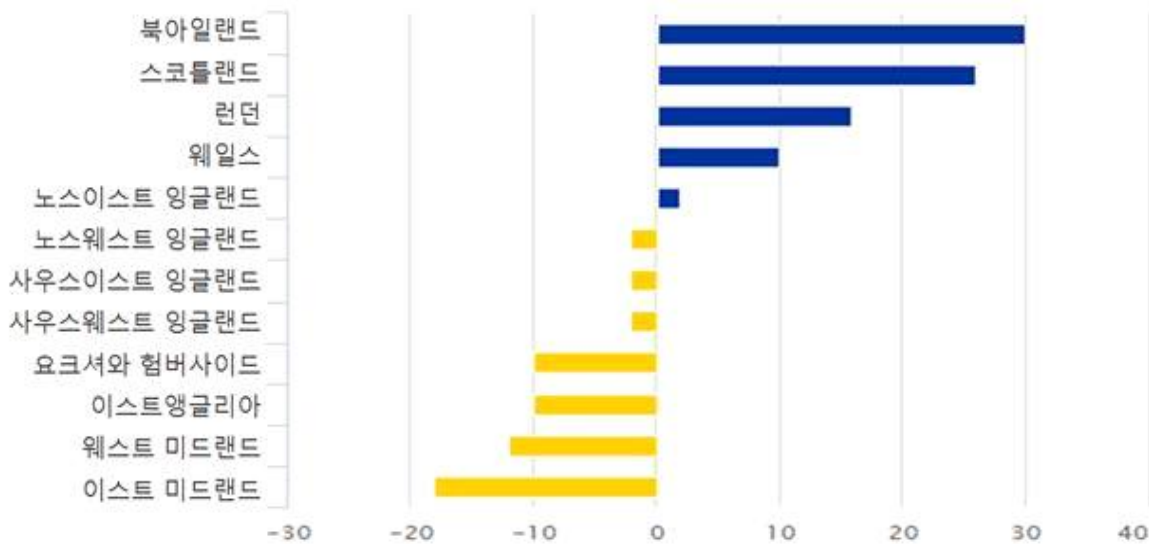
- 찬성과 반대가 혼전양상을 보이면서도 다소 EU 잔류로 기울어 있던 여론은 지난 5월 26일 2015년 한 해 동안 영국으로 유입된 이민자가 33만 명에 달한다는 영국 이민자 통계가 발표되면서 찬성여론이 우세해지기 시작했음.

< 브렉시트 여론조사 추이 >



자료원 : WhatUKThinks.org

< 지역별 탈퇴 대비 잔류 선호 비율(%) >



자료원 : Yougov

- 연령별로는 젊은층(18-34세)은 잔류를, 노년층(연금 수급연령인 65세 이상)은 탈퇴를 모두 약 15%의 차이로 지지.
- 지역별로는 북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 런던 지역은 잔류, 미들랜드와 요크셔 등은 탈퇴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음.

○ 브렉시트 찬성과 반대 캠프의 주요 논리

1) 무역(Trade)

- (반대) 영국 수출의 45%가 EU 역내로 나가고 있어 무관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EU에 잔류해야 함.
- (찬성) 탈퇴하더라도 EU와 새로운 협상을 할 수 있으며, 미국, 중국, 인도 등 주요 무역대상국과 개별협상을 통해 교역관계 강화 가능

2) 예산(EU Budget)

- (반대) 영국의 한 가구당 부담하는 EU 예산은 연 340파운드로 EU 회원국 지위를 보유함에 따라 얻는 혜택 연 3000파운드 수준에 비하면 많지 않으며, 탈퇴를 하더라도 EU단일시장에 접근하기 위해서 비용 발생 예상
- (찬성) 탈퇴를 하게 되면 영국 연간 교육예산의 50%에 해당하는 연 3억 5천만 파운드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며 이는 과학 연구나 신규산업에 쓸 수 있음.

3) 규정(Regulation)

- (반대) 28개 회원국들의 규정이 EU 표준으로 바뀌면서 불필요한 요식(red tapes)들이 많이 사라짐. EU 회원국으로 잔류하면서 협상을 통해 영국에 좀 더 유리한 규정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좋음.
- (찬성) 탈퇴는 노동법 및 보건안전 조치 관련 영국의 통제권을 되찾을 수 있으며 많은 기업들이 이를 선호함.

4) 이민(Immigration)

- (반대) 탈퇴한다고 해서 이민자 수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임
- (찬성) 탈퇴를 하면 모든 EU 역내 이주자는 수용하고 EU 역외로부터 영국에 이로운 이주자는 수용하지 않는 현재의 불합리한 시스템 수정 가능

○ 투표자의 51.9%가 브렉시트를 찬성하며 가결

- 가결과 부결의 표 차이 1,269,501표
- 전체 투표율 : 72%
- 지역별 투표율

. 총 12개의 개표센터 중 9개처 탈퇴우세, 3개처 잔류우세

(단위 : %)

연번	지역	찬성(탈퇴)	반대(잔류)	비고
1	West Midlands	59.3	40.7	탈퇴우세
2	East Midlands	58.8	41.2	탈퇴우세
3	East England	56.5	43.5	탈퇴우세
4	Yorkshire & Humber	58.0	42.0	탈퇴우세
5	North West England	53.7	46.3	탈퇴우세
6	North East England	58.0	42.0	탈퇴우세
7	South East England	51.8	48.2	탈퇴우세
8	South West England	52.6	47.7	탈퇴우세
9	Wales	52.5	47.5	탈퇴우세
10	Northern Ireland	44.2	55.8	잔류우세
11	Scotland	38.0	62.0	잔류우세
12	London	40.1	59.9	잔류우세

○ 브렉시트 가결 요인 분석

- 현지 언론조사 업체인 YouGov의 투표당일 여론조사결과에서도 잔류가 52% vs 탈퇴 48%로 소폭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박빙의 잔류가 예상되던 상황이었음.
- 그러나 개표 결과 잔류우세가 예상되었던 지역에서 잇달아 탈퇴우세가 나오고, 절대적 우세를 예상했던 런던 및 스코틀랜드의 투표율이 예상보다 낮게 나왔던 점 등이 잔류진영이 패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음.

- . 셰필드(Sheffield) : 소폭 잔류우세 예상, 51%로 탈퇴우세 결과
- . 버밍엄(Birmingham) : 강한 잔류우세 예상, 50.4%로 탈퇴우세 결과
- . 런던, 스코틀랜드 : 절대적 잔류우세 예상, 투표결과도 각 59.9%, 62%로 잔류가 우세했으나, 투표율이 각 69.8%, 67.2%로 평균 투표율보다도 낮았음.

4. 영국과 EU 주요국 반응

□ 영국

1) 산업계 동향

- **(British Telecom Group)** BT는 글로벌 인재로 구성된 인력풀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자사의 최대 장점, 브렉시트시 EU내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이 어려워질 것이므로 크게 우려됨(BBC '16.06.13)
- **(Siemens UK)** 지멘스가 영국에서 투자를 늘리고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영국이 EU에 잔류해야 하며, 브렉시트시 자사가 누릴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은 전혀 없음, EU잔류 지지(Financial Times '16.04.13)
- **(IG Index - 금융회사)** 영국은 창의성과 유연성 덕분에 EU 밖에서도 충분히 번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영국 경제는 EU경제보다 건실, 브렉시트를 지지('16.06.19)
- **(Virgin Group)** 경영자의 입장에서 항상 위험을 감수해 왔지만 브렉시트는 영국이 선택해서는 안 되는 위험, 현재 영국의 주요 성과는 EU회원국 지위에서 오는 것이라 굳게 믿으며 EU잔류를 지지 (Guardian '16.06.20)
- **(A社 유럽총괄법인 - 항공기 관련)** 영국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로부터 상당한 R&D 지원을 받고 있어 브렉시트시 비즈니스에 큰 타격 예상. 영국의 EU 잔류가 절실
- **(B社 영국사무소 - 금융)** 브렉시트 발생시 유럽본부를 아일랜드로 이전할 예정으로 이는 신뢰성 높고 잘 확립된 EU의 금융 규제 틀 안에 남아 영국과 거래를 유지하기에 최적이기 때문. 글로벌 기업들의 탈영국 러시로 영국 내 엄청난 양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 영국이 EU에 잔류할 경우에도 주식 및 외환 시장 변동성이 일정기간 지속되다가 안정화될 전망
- **(현지진출 우리기업 A)** 자사 수출품목 관련 영국의 수입처는 대부분 EU, 한국, 중국이어서 향후 통상환경 변화에 따라 가격경쟁력의 변화가 예상되며, 당 사는 결제를 파운드화로 하고 있어 수익성 악화가 우려됨.

- (현지진출 우리기업 B) 대외변수도 중요하지만, 브렉시트로 인한 대출이자 상승, 주택가격 하락, 고급인력 유입감소에 따른 영국 내 소비심리 위축이 제품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됨.
- (현지진출 우리기업 C) 신재생에너지 관련 EU 국가들이 영국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 또는 계획 중인데 브렉시트로 인해 향후 관세인상 및 인력 교류 제약이 있게 되면 산업 전반의 침체로 이어질 수 있음.
- (현지진출 우리기업 D) 브렉시트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나, 금융 중심지로서 영국이 제공하던 혜택이 줄어들게 되면 영국에 거점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
- (현지진출 우리기업 E) 단기적으로 우리 기업의 영국 탈출은 없을 것으로 보나, 주 고객인 영국진출 우리 기업들의 경영피해가 클 경우 자사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2) 주요 언론 동향

- (일간지 **Financial Times**) 파이낸셜 타임즈는 1973년 영국의 EEC 회원가입 이래 EU 회원국 지위를 지지해 왔음. EU가 직면하고 있는 난민문제, 이슬람극단주의(IS), 기후변화 등은 모두 EU차원에서 집단적으로 대응해야 함. EU잔류를 공식지지('16.06.15)
- (일간지 **Daily Mail**) 신문 첫 페이지에 캐머런 총리의 前전략 자문역 Steve Hilton의 'EU가 영국의 자치를 얼마나 어렵게 하는가'라는 기사를 게재. 굉장히 정직한 분석이며 EU 잔류론자들은 반성해야 한다고 논평하며 브렉시트 찬성 표명('16.05.23)
- (일간지 **The Times**) EU잔류가 영국과 EU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16.06.18)
- (일간지 **The Sun**) 브뤼셀의 독재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EU 밖에서 영국은 더욱 풍요롭고 안전해 질 수 있다고 논평, 브렉시트 지지('16.06.19)
- (일간지 **The Guardian**) 브렉시트가 영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강도의 문제이며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점은 명백하므로 EU 잔류 지지('16.6.20)

3) 학계 및 연구기관

-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Mark Littlewood** 원장
EU탈퇴 결정은 향후 영국이 자유무역협정 등을 좀 더 글로벌한 관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했다고 생각하며 향후 정부는 EU와 상호 이익이 되는 협상을 진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함. 다만, 리스본 조약 50조를 급하게 발동할 필요는 없으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
- **(University of Surrey) Simon Usherwood** 정치학과 교수
EU와 더 많이 얽혀있을수록 EU를 탈퇴하기가 더 어려움. 유로존 국가들의 경우가 그러하나 독자적인 화폐를 사용하는 영국은 상황이 다름. 이제 선거결과 탈퇴진영이 국가 전역에 만연한 EU회의론을 업고 승리했기 때문에 다음 단계는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강하게 반영하고자 할 것으로 예상됨.

4) 정치계 동향

- **(보수당)** 보리스 존슨(前 런던시장), 마이클 고브(법무장관) 등 EU탈퇴를 지지했던 84명의 보수당 의원들은 투표종료 즉시 국민투표 결과와 상관없이 데이비드 캐머런이 총리직을 유지해야한다는 내용의 서한 전달하였으며, 투표 결과 발표 후 캐머런 총리의 성명을 제외하면 잠잠한 상황임. 다만, 보리스 존슨 전 런던시장의 차기 총리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언급되고 있음.
- **(노동당)** 노동당 의원들 사이에서 투표결과에 대한 제레미 코빈(Jeremy Corbyn) 노동당 대표의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음. 실명이 밝혀지지 않는 않았으나 노동당 의원 중 한 명이 24일 오전 공식적으로 코빈의 사퇴를 촉구할 예정이라는 언론보도도 나오고 있을 정도로, 브렉시트 결과에 대한 당내 비난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임. 코빈은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브렉시트의 책임을 물어 캐머런 총리가 조기 사퇴를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

- (영국독립당) EU탈퇴를 주도한 나이절 패라지(Nigel Farage) 영국 독립당 대표는 브렉시트가 확정되자 “오늘은 영국 독립기념일로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며 국민투표 승리를 선언함. 또한 기자회견 자리에서 브렉시트를 실현할 수 있는 새 정부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캐머런 총리의 사퇴를 촉구

5) 정부 공식 의견

○ (투표 직후) 영국 정부 공식 성명 발표 내용

- 캐머런(David Cameron) 영국 총리는 투표결과가 발표된 직후인 현지시각 오전 8시 20분 성명을 통해 오는 10월 보수당 전당대회 전에 총리직을 사퇴하겠다고 발표함.
- 캐머런은 국민들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하며 향후 리스본 조약 50조 발동 시기를 결정하는 문제부터 EU와의 탈퇴협상 자체도 새로운 총리가 맡아야 한다고 탈퇴 이유를 밝힘. 다만 자신은 자신의 신념에 따라 최선을 다했다고 하며 향후에도 영국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라고 언급함.
- 또한 캐머런은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여전히 자신은 영국이 EU 내에서 더 안정적으로 번영할 수 있다고 믿지만, 영국은 경제 펀더멘털이 강하고 당장 이동의 자유 등에 제약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며 시장을 안심시키는 발언도 포함.
- 보수당이 승리한 2015년 영국 총선은 2011년 고정임기 의회법 개정에 따라 실시된 첫 번째 총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브렉시트 책임론과 맞물려 새로운 정부가 EU와의 협상을 이끌어야 한다는 여론에 밀려 조기총선 가능성도 존재

□ 벨기에 및 EU

1) 산업계 동향

- (**Ryanair** - 아일랜드 저가항공사) 영국의 EU 탈퇴에 대한 반대 의견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며, 만약 브렉시트 발생 시 영국 내 투자자금을 회수하여 이를 타 EU국으로 옮길 것이라 경고함 (벨기에 일간지 La libre '16.05.16).
- * Ryanair사의 전체 연간 이용객 수 1억 명 중 4천만 명이 영국-EU 구간 노선을 이용 중. 동 사는 영국 내 총 13억 유로 규모를 추가 투자할 예정이었음.
- 동 사는 브렉시트 반대투표 촉진을 위해 6월 22일~23일 양일간 유럽발 영국행 항공권을 19.99 유로에 판매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발표('16.05.18 당사 홈페이지)
- * 해외거주중인 영국 국민들이 고국으로 돌아와 브렉시트 반대표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동 회사의 취지

< Ryanair사의 브렉시트 프로모션 >



자료원: 프랑스 방송사 BFMTV 6.3일자 기사

- (**Business Europe** - 유럽의 전경련에 해당) 유로존 경기침체, 테러 및 EU 내 난민유입 급증 등으로 유럽통합 상징인 쥘조약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유럽 내 '평화, 안보, 번영'이라고 밝힘. 이에, EU 통합을 위해서 영국 국민들이 계속 EU 시민으로 남아있어 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동 협회 보도자료, '16.06.02)
- (**Fédération des Entreprises de Belgique; FEB** - 벨기에 기업연합) 유럽의 번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영국이 EU 회원국으로 남아있어야 한다고 브렉시트에 대해 반대. 만약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경우,

역내시장 분열이 올 것이며 이는 국제사회에서 EU의 입지가 약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밝힘(벨기에 경제주간지 Trends, '16.02.17).

2) 주요 언론 동향

- (일간지 L'Echo) 영국과 교역 교류가 많은 벨기에의 경우, 브렉시트 발생 시 20억 유로 가량을 손해 볼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EU를 탈퇴하게 되면, 영국은 지금까지 EU가 맺어왔던 수십 개의 모든 무역협정들에 대해 재협상을 해야 하는 만큼 브렉시트 발생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전망됨('16.03.25).
- (일간지 La libre) 영국 국민투표 결과가 EU 탈퇴로 나오는 경우, 2019년까지 영국 GDP는 4.3%p 하락할 것이며 1,700여개에 달하는 기업들이 파산하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임. 이 같은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브렉시트는 영국에게 있어 결코 좋은 선택이 될 수 없음('16.05.26).

3) EU 주요기관 및 국제기구 공식 의견

- (EU 집행위) 장클로드 융커(Jean-clode Junker) 집행위원장
 - 영국의 EU 탈퇴를 예상하지 않고 있으며, 영국 국민들이 브렉시트를 선택하는 경우에 대한 플랜B(차선책) 또한 가지고 있지 않음. 플랜B가 있다는 것은 EU가 영국의 탈퇴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되기 때문인데, EU는 영국 국민들이 충분히 이성적인 결정을 내릴 것으로 확신하고 있음(프랑스 일간지 Le Figaro '16.02.16).
 - 브렉시트 발생 시, 영국은 EU로부터 더 이상 유럽 회원국이 아닌 제3국으로 대우받게 될 것임. 경고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영국과 EU의 관계는 지금과는 확연하게 달라질 것이 자명함(유럽 전문 일간지 Euractiv '16.05.20).
- * 언론 보도자료 이외 집행위 공식 홈페이지(europa) 보도자료 검색 결과, 브렉시트에 대한 집행위 공식 의견은 없는 것으로 확인

- (유럽의회) 마르틴 슈츠(Martin Schulz) 의장
 - 현재 유럽통합에 대한 회의론이 증가하는 역내 분위기 속에서 만약 브렉시트가 발생하는 경우 다른 회원국들도 추가적으로 EU의 탈퇴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가 발생할 리스크가 있음(독일 일간지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16.04.11).
- (유럽중앙은행) 마리오 드라기(Mario Draghi) 총재
 - 영국의 EU 탈퇴여부를 벗어나 이미 관련된 국민투표 시행이 유럽 금융시장에 압박이 되고 있음. 또한 브렉시트 발생 시, 유로존 경기회복에 있어서도 일정 정도 위협을 받을 것임(프랑스 일간지 La croix '16.04.21).
- (IMF) 크리스틴 라가르드(Christine Lagarde) 총재
 - 브렉시트는 영국 미래에 불확실성을 가져다 줄 것이며, 영국 경제 성장에 있어 매우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 경고(프랑스 일간지 La Tribune '16.05.13)

□ 독일

1) 산업계 동향

- (Daimler AG - 완성차 기업) 영국 내 개인 승용차 판매 부진 예상. 브렉시트시 영국의 관세 상승과 영국 파운드화의 강력한 약세 전환으로 독일 수입차 가격이 상대적으로 폭등 예상. 관련 연쇄 효과로 영국에 위치한 독일 완성차 지점들이 영국에서 철수, 추가 부대비용 발생 전망 (주간지 Focus Money, '16.06.17.)
- (Continental AG - 자동차 부품) 브렉시트가 EU 회원국과 영국 양측 모두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기업 전체 매출액의 약 3%가 영국에서 발생, 브렉시트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으로 타이어 판매 실적 부진 우려 (일간지 BILD, '16.06.20.)
- (Adidas AG - 스포츠용품) 영국의 새로운 통관 및 관세 규정의 도입에 따라 통관 절차 지연, 생산 공장 및 물류·인력에 대한 체류 규정 변경 등으로 막대한 추가 비용 예상(일간지 Handelsblatt, '16.05.24.)

- **(DZ 은행)** 심각한 경우 '17년까지 독일 경제에 450억 유로에 이르는 손실 및 경기 침체 가능성 부각, 통화가치 및 주가 하락과 해외 투자자들의 신용 경색이 실물 경제에 타격 가능
- **(Berenberg 은행)** 경제전문가 쉬미딩(Holger Schmieding), 영국이 심각하지 않은 경기 침체에 빠질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기타 EU 국가 내 경제성장에 큰 타격 전망, 향후 불확실성 감소의 경우에만 경기회복 가능
- **(C社 유럽총괄법인 - 원자재)** 브렉시트 시에도 자사 생산품의 무관세는 변함없어 가격경쟁력에 타격 없음. 단, 영국 경기부진에 따른 설비투자 감소로 영국 내 해당 품목 수요가 감소 가능성이 있어 우려됨
- **(D社 서유럽총괄법인 - 전자)** 생산공장이 동유럽에 있어 브렉시트 시 관세인상으로 영국 수출이 어려워질 전망, 영국의 EU잔류 희망
- **(기간산업에 타격)** 독일의 對영국 수출의 절반이 자동차·화학·기계 분야에서 이뤄지므로 3대 산업분야에 타격 예상
 - * 특히 영국은 기계산업 관련 전년도 최대의 성장 시장 중 하나로 독일 수출에 직격탄
- **(기업 이익감소)** 대부분의 전문가는 브렉시트 발생시 영국의 파운드화의 평가절하 전망, 이는 직접투자에 있어 감가상각 및 독일 기업의 이익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 다대
 - * 對영 직접투자 규모는 총 1,210억 유로(독일의 해외직접투자의 약 7%), 특히 독일 관광기업 TUI Travel, 디스카운터 Aldi, Lidl, 전력기업 E.ON, 보험사 Allianz, 자동차부품기업 Robert Bosch, 완성차기업 BMW 등 대영 투자 규모가 큰 기업에 타격 예상
- **(투자 하락세)** 독일 주식시장은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투자자들간 긴장감이 증폭되면서, DAX 지수 상승 억제 요인으로 작용. 정치 리스크로 인해 저금리 및 대체 투자 기회 부족 등 매력적인 시장 조건에도 투자를 꺼리는 움직임
- **(실업 증가 및 영국 내 입지 축소)*** 브렉시트 발생시 설문기업의 39%가 독일 내 고용시장에 부정적 영향 초래 전망
 - * 베르텔스만 재단의 위임 하 수행된 400개 독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 3개 중 1개 기업이 영국 내 입지 축소 고려 또는 입지 이전 고려, 특히 이는 IT와 금융 분야에서 두드러질 전망
 - * 日 히타치(Hitachi) 그룹, 영국 소재 유럽 영업의 일부를 타국가로 이전 계획
 - ** 美 은행들은 영국이 EU 소속일 경우에만 금융 중심 입지로서 중요하다고 밝힘
- (독일의 금융·기업 입지 강화 전망) 반면, 독일 금융의 중심인 프랑크푸르트가 외환거래시장으로 선도적인 입지를 보유한 런던의 지위 격하에 따른 반사이익 누릴 전망*
 - * 글로벌 금융연합 ACE가 12,000개 회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임
- 또한 독일 수도 베를린이 고성장 분야인 인터넷이나 IT 기업의 입지로 부각 가능
 - * 독일경제연구소(IW)는 장기적으로 영국의 GDP 10% 이상 감소 전망

2) 주요 언론 동향

- (제2 공영방송 ZDF) 독일 내에서는 영국의 탈퇴가 독일에 큰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다 불안감이 크게 확산되고 있지 않은 상황
 - * '16.6월 자체 설문 결과, 응답자의 4%, 29%가 각각 매우 큰 경제적 피해 또는 큰 경제적 피해 예상, 반면 44%는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11%는 경제적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답변. 기타 12%.
- (주간지 Die Zeit) 佛 올랑드 대통령과 獨 메르켈 수상은 브렉시트 플랜 필요, EU의 단계적인 몰락 방지를 위해서는 EU의 매력도 제고 및 독-프간 연합 강화 필요

3) 학계 의견

- (독일 경제 및 정치입지 약화) 정치학자이자 영국전문가인 슈투름(Roland Sturm), 브렉시트시 강력한 경제 파트너가 EU를 떠나고 역내 자국 이익 우선주의 경향 확산을 초래, 독일 경제를 약화시킬 것. 더불어 미래 유럽의 행보에 불확실성을 더하며, 유럽 통합 저해(Die Zeit)
- EU 경제 강국이자 비용분담을 담당해온 영국의 EU 탈퇴는 독일의 정치적 입지 약화도 초래
 - * 영국은 EU에 매주 4억 유로 지불, 영국은 독일 제품, 특히 자동차 시장의 주 고객

- (EU와 영국 모두에 피해) 경제학자들은 브렉시트가 EU와 영국 모두에 피해를 줄 것이라는데 의견 일치, 대응방안 준비 요망
 - * 2015년 12월 獨 메르켈 총리는 영국 캐머런 수상의 방문시 브렉시트 방지 위한 노력
- EU 이미지를 진보, 안정, 성장과 고용의 상징으로 구축하는 것이 중요
 - * 다만 총 27개국 회원국간 의견조율을 거친 경제 정책적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전략 추진은 시간이 오래 소요될 전망

4) 정부 공식 의견

- 6.2일, 독일 메르켈(Angela Merkel) 총리, '책임과 EU 단일시장의 비용을 분담하지 않는 국가와는 (EU 회원국일 때와) 동등하게 협상할 수 없고, 동일하게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없다'는 경고성 발언
 - * 일례로 스위스와 노르웨이의 경우, EU 소속은 아니나 EU 재정에 기여하며, EU 집행위의 다수의 규칙 준수
- 메르켈 총리는 현재 EU와 미국간 협상 중인 TTIP(범대서양무역투자 동반자협정)를 염두에 두고 '영국은 제3국과의 FTA에서도 EU 차원에서와 같은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임
- 가브리엘(Sigmar Gabriel) 연방경제에너지부 장관은 영국의 EU 탈퇴에 따라 EU 입지 하락, EU 결속에 대한 믿음의 급격한 하락, 영국과 유럽 경제에 부정적 영향, 특히 금융시장 내 부정적 반응과 정치 비용 등 심각한 영향에 대해 경고
- 가브리엘 장관은 EU의 이웃 지역인 중동 내 EU의 입지 약화를 전망하며 영국 정계에 EU 잔류 촉구

□ 프랑스

1) 산업계 동향

- (Air Liquid - 프랑스 가스전문 기업) 유럽이 겪고 있는 단일 디지털 시장, 은행시스템 감독의 강화, 테러, 난민위기 등 이슈와 난제들을 개별국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 EU 내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함. 영국잔류 지지(Financial Times '16.05.31)
- (Airbus - 프랑스 항공기 제작사) 브렉시트 시, 영국의 미래는

그야말로 불확실성에 놓이게 되어 이는 기업들에게 매우 부정적. 동사는 연간 약 5억 3천만 유로 규모를 영국에 투자 중이며 직접적으로는 1만 5천명이, 간접적으로는 10만 여명의 종사자들이 연관되어 있는 바, 브렉시트 시 영국 기업 활동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 경고.(일간지 La croix '16.02.24)

- (Total - 프랑스 정유사) 브렉시트 발생 시 EU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며, EU는 영국 없이도 잘 유지될 수 있음(일간지 Les Echos '16.05.24)

2) 주요 언론 동향

- (일간지 Le Figaro) 타바(Guillaume Tabard) 편집장 겸 정치부 논설위원은 '유럽, 국민투표' 두 글자는 과거 유럽 헌법 제정 관련 국민투표의 실패로 큰 충격을 받았던 프랑스정계에서는 '분열, 실패 및 혼란'의 동의어로 통용, 브렉시트 국민투표에 부정적.
 - * 프랑스 정계는 모두 브렉시트를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영국의 EU 잔류 결정에 안도하며 친유럽주의자들은 유럽건설 프로젝트를 모두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
 - * 분리주의자들은 EU가 연방제도의 추진 면에서 영국의 감시에서 벗어나지 못해 제지 받을 것으로 예상
- (일간지 Le monde) '14년 기준으로 영국이 EU 분담금의 9.77%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경우, 타 회원국들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임. 현재 유럽의 경제침체 상황에서 브렉시트로 인한 재정부담 가중은 향후 유럽 미래에 더욱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임('16.02.16).
- (일간지 Le Huffington Post) 영국 수출의 절반가량이 역내로 수출되고 있으며 일자리 80만 여개가 EU와 연관되어 있는 만큼, 브렉시트가 발생하면 영국은 유럽대륙으로부터 고립될 위기에 처해질 것임. 또한, 유럽회의론(Euroscepticism)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브렉시트는 폴로시트(Poloxit) 등 여타 회원국들의 EU 탈퇴 움직임을 촉발할 가능성이 높음('16.02.19).
- (방송국 Europe 1) EU의 對영국 교역수지 흑자 규모가 76억 파운드에 달하는 만큼, EU는 어떻게든 영국의 EU 탈퇴를 막으려 노력할 것임. 한편, 만약 브렉시트가 현실화 되는 경우, EU 통합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계속 표명해왔던 영국의 탈퇴로 유럽통합을 위한 정책들은 현재보다 더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16.02.18)

3) 정치계 동향

- (제1야당 공화당(LR)) 영국 국민 투표는 새로운 민주주의의 신호로서 영국의 문제 제기를 계기로 EU를 재구성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영국의 EU 잔류 결정을 반감.
- (제2야당 국민전선(FN)) 국민전선은 브렉시트를 바라지 않는 바 영국의 EU 잔류 결정을 지지
 - * 국민전선(FN)은 '17년 프랑스 대선 승리시, EU와 협상하려했던 영국의 유로 단일통화 논의, 중앙은행, 프랑스-영국간 국경 등 많은 부문에서 회원국 주권이 유지되는 바, 영국의 EU 잔류 지지
- (차기 대선 후보) 연합 집권당 내 군소 다수 좌파 대표이자 차기 대선 후보인 장뤽 멜랑송 유럽국회의원, 브렉시트는 타 유럽국가에 전염될 위험성이 있다며 반대, 영국의 EU잔류를 반감.

4) 정부 공식 의견

-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3월부터 수시로 브렉시트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독일 총리와 브렉시트 사후 대책 논의
 - * 5.29일 EU 강화 및 이상적 유럽 재건에 필요한 대책 강구
 - * 국민 안전 및 방위를 포함한 경제 성장, 청소년, 시민권 등을 주제로 정치적 해답 검토(단, 제도문제는 프랑스 대선 이후로 연기)
- 지난 6월 1일 프랑스 총리 및 6개 부처장관, 각의에서 경제·금융적 파급 영향 분석 및 상이한 시나리오 검토
- 6월 16일 파리에서 개최된 프-독 정상회담 시, 구체적 대책논의
 - * 영국 국민투표 결과와 무관하게 EU 회원국에 해결책 제안 예정
- 영국국민의 EU잔류 결정한 다음 날 즉시 프-독이 마련한 정치적 해결책을 EU이사회에 제안
- 6월 26-27일 EU이사회, 영국 국민투표 사후 대책회의 개최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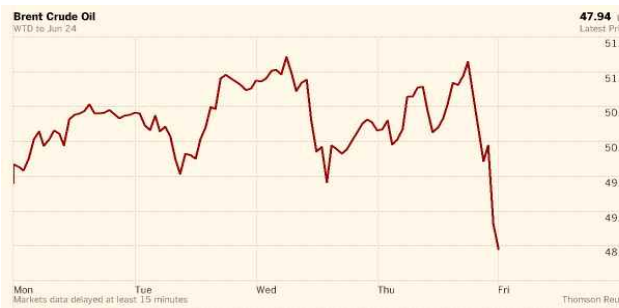
II

영국에 미치는 영향

1. 투표 직후 주요 경제지표 동향

- 주식시장 : 시가총액 상위 100개 종목지수인 FTSE 100은 개장 직후 8%이상 급락, 영란은행(BOE) 총재의 유동성 공급 발언으로 낙폭을 4~5% 수준으로 좁힘
 - * FTSE 250(상위 100개를 제외한 250개 상장기업)지수도 장 초반 11.4%까지 추락 하며 사상 최대 하락폭 기록
- 현물시장 : 배럴당 51달러 선이던 영국 브렌트유는 6%이상 하락, 48 달러선 붕괴. 대표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금 선물가격은 5.2% 폭등 하여 온스당 1,350달러 상회

<국제유가(브렌트유)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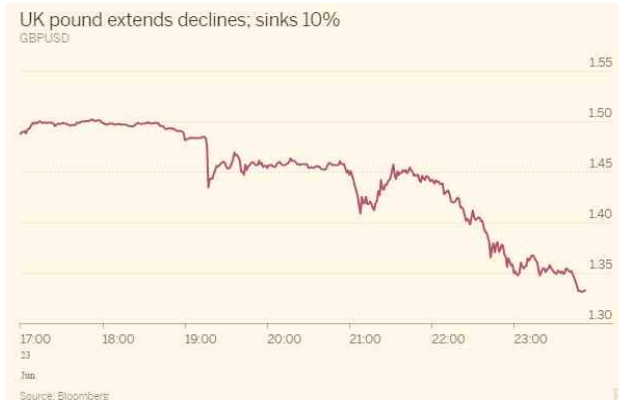
<온스당 금 현물시세 추이>



자료원 : Financial Times(파이낸셜 타임즈)

- 외환시장 : 파운드화 가치는 장중 10% 가까이 폭락, 1985년 이래 최저 수준인 파운드당 1.33달러까지 급락
 - * 도이체뱅크는 현재 하락치에서 15% 더 하락한 파운드당 1.15달러까지 하락 예상

<1파운드당 달러화 변동 추이>



<1971년來 가장 큰 1일 '급락폭'>

Rank	Date	Close, pts	Performance
1	24 June 2016	1.35*	-9.26%
2	16 September 1992	1.7850	-4.05%
3	04 June 1981	1.9400	-3.77%
4	05 January 1978	1.8865	-3.75%
5	01 November 1976	1.5875	-3.68%
6	20 January 2009	1.3928	-3.41%
7	18 December 2008	1.5015	-3.35%
8	09 January 1992	1.8160	-3.35%
9	01 December 2008	1.4884	-3.21%
10	06 September 1985	1.3250	-2.93%

*Intraday trade, Since 1971 @_PeterWells, FT, Bloomberg

자료원 : Financial Tim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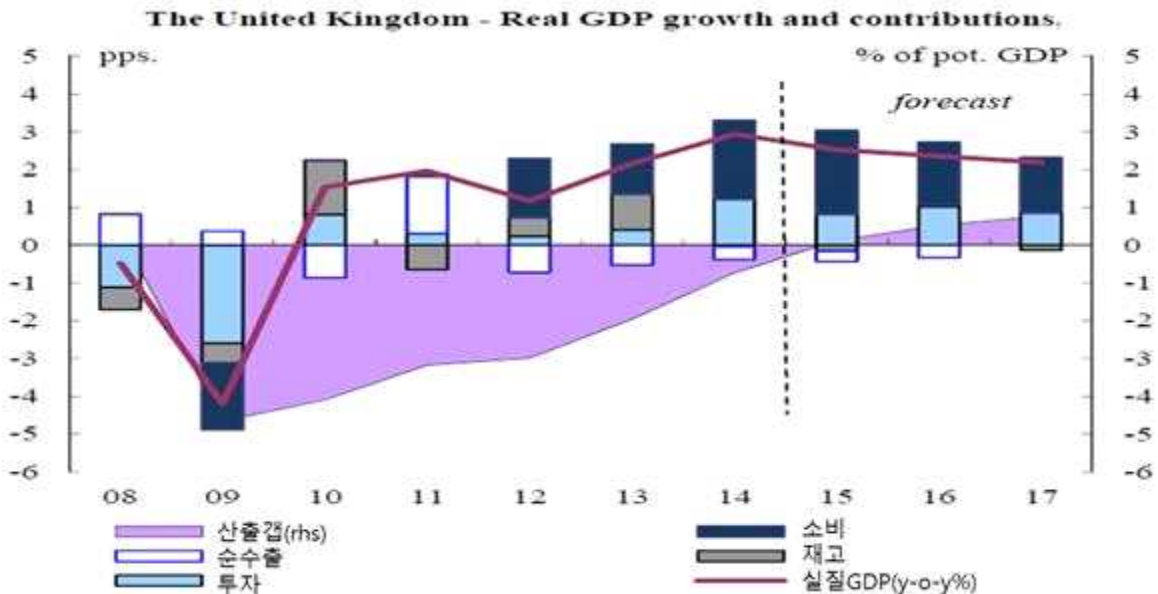
2. 경제 분야

○ GDP 성장률 감소 및 실업률 증가

- 금융위기 이후 영국경제는 민간소비 증가를 토대로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EU 경제성장을 견인해 왔음.
- 실업률도 5% 중반에서 안정화 되면서 브렉시트 요인을 제외한 2015년 11월 EU집행위 전망자료에 따르면 영국은 2016년에도 2.4%로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됨.

* 영국의 민간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65%

< 영국경제 성장률 추이 및 전망('15.11) >



자료원 : EU집행위(2015.11월 발표치)

- 그러나 브렉시트가 가결됨에 따라 영국의 경제성장률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며, 지난 5월 영국 재무부는 EU탈퇴가 영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충격시나리오(Shock scenario)와 심각한 충격시나리오(Severe shock scenario)로 구분하여 분석한 바 있음.
- 동 자료에 따르면 브렉시트로 인한 영국경제의 단기적 충격 요인은 경제개방도 감소에 따른 전환효과(transition effect), 국민투표 이후 경제적 결정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오는 불확실성효과

(uncertainty effect),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금융여건효과 (financial conditions effect) 세 가지

- 충격시나리오에 따르면 EU탈퇴 시 수출 및 투자 감소, 노동력 축소 등으로 인해 잔류시보다 GDP가 약 3.6% 하락하고, 실업률은 2.3%(52만 명 증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심각한 충격시나리오에 따르면 잔류시보다 GDP가 약 6%하락하고, 실업률도 2.6%(82만 명 증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재무부는 영국의 이 같은 경기하락이 파운드화의 약세(약 12%)를 가져오고 이는 수입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물가상승률(CPI inflation rate)도 잔류시보다 2.3%에서 2.7%정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

<브렉시트에 따른 영국의 주요경제지표 변화 예측치>

경제지표	충격 시나리오	심각한 충격 시나리오
국내총생산(GDP)	-3.6%	-6.0%
소비자물가상승률(p%)	+2.3	+2.7
실업률(p%)	+1.6	+2.4
실업(수준)	+520,000	+820,000
평균 실질임금	-2.8%	-4.0%
주택 매매가	-10%	-18%
파운드화 환율 지수	-12%	-15%
공공부문 순 채무	+240억 파운드	+390억 파운드

주) 동 자료는 탈퇴 2년 후를 가정하여 잔류 시에 대비한 변동 폭(%)을 나타낸 것임.

자료원 : 영국재무부, 'The immediate economic impact of leaving the EU' 2016.5월

- 주요 기관별 전망치는 영국 중앙은행(BOE : Bank of England)을 제외하면 대부분 잔류 시보다 최대 약 7.7%까지 경제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예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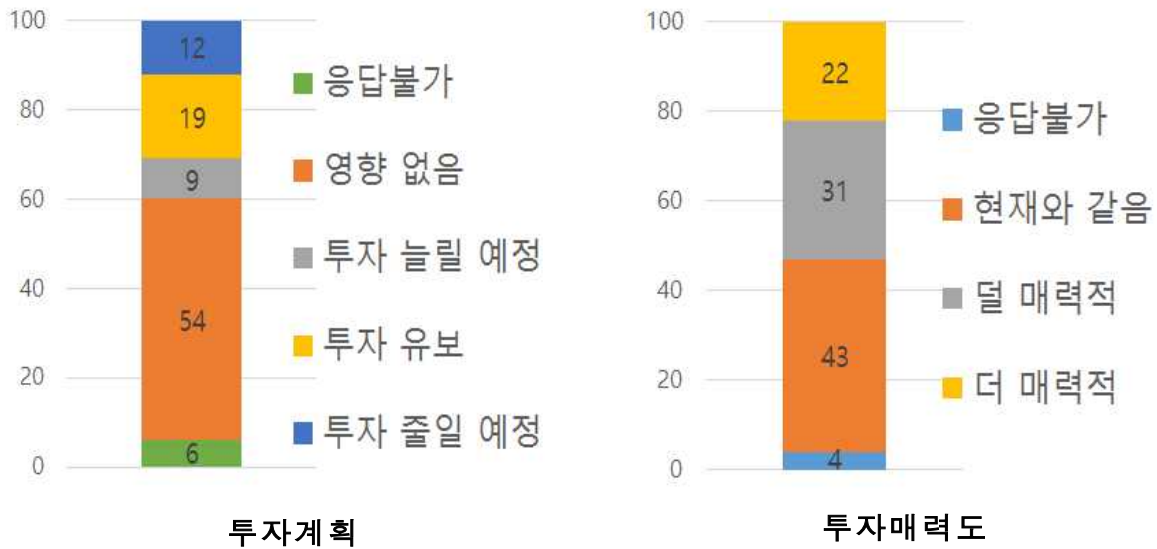
<주요 기관별 브렉시트에 따른 영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기관명	GDP growth(%)
OECD	-7.7% ~ -2.7%
영국 재무부	-6.0% ~ -3.6%
IMF	-1.5% ~ -9.5%
영국 중앙은행	9.6% ~ 1.6%
PwC	-5.5% ~ -3.1%

자료원 : 각 기관

- PwC의 장·단기 고용시장 분석 자료에 따르면 EU탈퇴 후 영국의 경제위축에 따른 생산성 감소는 수요와 투자 감소로 이어져 2020년까지 고용이 1.7%(스위스 모델) ~ 2.9%(WTO모델)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장기적으로 경제위축에 따른 고용감소 효과가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이민 통제에 따른 노동력 감소는 2030년까지 영국 전체 고용인구의 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
- 외국인투자(Inward FDI) 감소 가능성
- 영국무역투자청(UKTI : UK Trade and Investment)의 투자유치 연례보고서(Inward Investment Report 2014/15)에 따르면, 2014년 영국의 외국인투자유입액은 440억 파운드(유럽 전체 투자유치금액의 1/3해당)로 전년대비 50%이상 증가하였으며, 누적금액 기준 사상 최초로 1조 달러를 돌파하며 유럽 내 1위, 세계 3위의 투자유치국이 되었음.
 - * 동 기간 전 세계 FDI는 11%, 유럽 내 FDI는 16% 감소
 - Ernst & Young의 2015년 영국 투자매력도 조사(EY 2015 UK attractiveness survey) 결과에 따르면, 영국은 편리한 교통 및 기술 인프라, 경쟁력 있는 노동시장 등으로 인해 미국, 중국, 인도에 이어 투자선호국가 4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투자자의 72%는 영국의 EU 단일시장 접근성도 다른 조건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응답해 브렉시트가 영국의 투자유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됨.
 - 세부적으로 영국의 EU탈퇴 시 2017년 말까지 투자계획을 묻는 문항에 대해 투자자의 31%가 브렉시트 결과가 최종 마무리될 때까지 투자를 동결하거나 줄이겠다고 응답
 - EU탈퇴가 영국의 투자매력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항에서는 부정적이라는 답변이 31%로 긍정적이라는 답변 22%보다 많았음.

< 브렉시트 시 對 영국 투자계획 및 투자매력도 변화 >



자료원 : EY 2015 UK Attractiveness Survey

- 런던정경대(LSE)가 2016년 4월 발표한 보고서 ‘The Impact of Brexit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K’에 따르면 EU탈퇴 시 영국은 향후 10년간 최대 약 22% 투자 감소가 예상되며 투자 감소의 주요 요인은 아래의 3가지임.

- 1) 영국이 EU단일시장의 일원이라는 점은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측면에서 다국적기업들이 영국을 EU시장 수출플랫폼으로 활용하는 이점이었으나, 탈퇴 시 이러한 이점을 누릴 수 없게 됨.
- 2) EU탈퇴 시, 영국에 본사 또는 지사를 둔 다국적 기업들은 본-지사 간 조정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음. 예를 들어 부품조달에 서로 다른 규정과 비용이 수반될 수 있고, 인적자원 이동의 제한으로 기업 내 인력이동이 더 어려워 질 수 있음.
- 3) 향후 영국과 EU간 무역협정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한 불확실성 역시 투자유치에 장애가 될 수 있음.

- 이러한 변화로 영국에 유럽시장을 목표로 본사 또는 지사를 보유한 다국적 기업들은 유럽시장에 대한 접근성 악화를 사유로 다른 유럽국가로 이전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對영국 투자 감소로 이어질 전망

* 실제 시티그룹이나 모건스탠리 등 글로벌 기업들이 국민투표 이전, 브렉시트가 현실화 되면 런던거점을 아일랜드로 이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음.

- 신용평가기관인 S&P는 주로 대규모의 투자유치를 통해 프로젝트 자금을 조달하는 부동산, 건설, 항공, 국방, 오일, 가스 산업 등에 대한 투자 감소가 큰 반면, 미디어, 비즈니스 서비스, 핀테크 등 기술 산업은 투자유치에 큰 타격이 없을 것으로 예상

○ 대외무역 위축 가능성

- EU는 영국의 최대 교역대상지로 2015년 기준 영국의 對EU 수출은 2,230억 파운드(총 수출의 43.7%), 對EU 수입은 약 2,910억 파운드(총 수입의 53.1%)를 기록
- 영국의 EU역내 무역비중은 역내 다른 주요 국가들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나, EU와의 교역에서 영국의 무역적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이 점이 EU탈퇴 논리가 되기도 하였음.

* EU 주요국 역내교역비중(Eurostat, 2014 기준) : 영국(50.8%), 스페인(60.4%), 독일(61.3%), 네덜란드(61.9%) 프랑스(64.6%)

<영국의 對EU 수출입 현황>

(단위 : 억 파운드)

지표	2012	2013	2014	2015
수출	231.2	231.0	230.2	223.3
수입	272.4	286.5	289.1	291.1
무역적자	41.2	55.5	58.9	67.8

자료원: 영국통계청(ONS)

- 영국의 EU탈퇴로 인한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EU회원국 지위 상실에 따라 EU시장은 물론, EU와 FTA를 체결하고 있는 한국을 포함한 53개 경제권에 대한 시장접근이 제한된다는 점
- 영국은 EU와의 무역협정을 다시 체결하지 않는 이상, WTO회원국에 적용되는 최혜국대우(MFN)를 받게 되며, 이는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적용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함.
- 따라서 단기적으로 관세장벽에 의한 수출 타격은 불가피하며, 특히 영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기계류(13.9%), 자동차 및 부품(11%), 의약품(7.8%) 분야의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됨.

* EU 단일시장 내에서는 상품교역의 완전자유화가 보장되고 있으나 브렉시트로 인해 영국은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며, 특히 영국의 대 EU주요 수출품인 자동차 및 화학제품의 경우 MFN 관세율이 각 10%와 4.6%에 달해 수출 감소 가능성이 높음.

-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통상주권 회복에 따라 교역상대국의 시장 환경과 양자 간 교역구조를 파악하여 그에 가장 적합한 관세율과 산업규제 항목들에 대해 상호 합의한다면 대외무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음.

- 다만, 이 경우에도 영국이 더 이상 5억 명의 인구를 보유한 단일시장 EU회원국이 아니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협상력을 가지게 될 것 인지 미지수임.

- 브렉시트가 가결됨에 따라 향후 영국은 총리가 공식적으로 EU에 탈퇴를 통보한 후 2년 간(2018년까지) EU와 무역관계 재조정 협상을 하게 되며, 현재 영국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크게 아래의 5가지임.

* 리스본 조약 제 50조 : 탈퇴 예정국 정부의 요청과 EU 집행위의 합의가 있을 경우, 해당국의 탈퇴 결정 후 2년 동안 EU와 탈퇴의 세부조건 및 향후 관계 정립을 위한 협상을 진행할 수 있음.

1) EEA(노르웨이 모델) : EEA 회원국으로 EU내에서 노동, 자본, 재화 및 서비스 이동의 자유를 그대로 누리게 되나, EU 예산을 분담해야 하며 EU 규정을 일정 부분 따라야 함.

2) EFTA(스위스 모델) : EU와 일련의 개별 무역협정(bilateral accords)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협상에 따라 EU단일시장 접근의 정도가 결정되지만 그에 상응하는 만큼 EU규정을 따라야만 함.

3) Customs Union(터키 모델) : EU와 역내관세가 없지만 해당 산업분야가 제한되며, 제3국 시장에 대한 접근도에 상관없이 대외 공동 관세를 따르는 일부 EU규제의 적용을 받게 됨

4) Bilateral FTA 모델 : EU와 양자 간 FTA를 체결하는 방식으로, 합의조건에 따라 분야 및 시장접근의 정도가 결정됨.

5) WTO 모델 : EU와 어떠한 개별 무역협정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EU의 예산이나 규정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지만 3가지 모형 중 EU 단일시장 접근권한이 가장 낮은 WTO 기준에 준하는 대우를 받게 됨.

<EU와의 관계 유형>

	EU 입법 투표권	무관세 무역	관세 동맹, 공동 무역 정책	상업상 공평한 경쟁	지속 적인 통합	내무 사법 정책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	셴겐 무국경 지대	EU 예산 분담	유로존 가입	
現 영국	○	○	○	○	X	△	○	X	△	X	
일반적 EU 회원국	○	○	○	○	○	○	○	○	○	○	
노르 웨이	X	△	X	△	X	△	○	○	△	X	
양 자 협 정	스위스	X	△	X	△	X	△	○	○	△	X
	캐나다	X	△	X	△	X	X	X	X	X	X
	터키	X	△	△	△	X	X	△	X	X	X
WTO 회원	X	X	X	X	X	X	X	X	X	X	

주 : ○ 완전한 참여, △ 부분적/자발적/특별 지위, X 해당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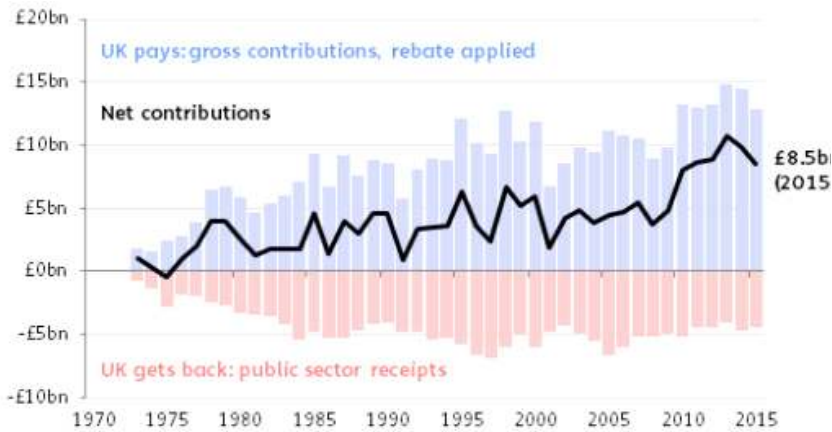
자료원 : 영국 하원(House of Commons)

- 영국이 상기 5가지 대안 중 어느 것을 선택하게 되더라도 현재 EU회원국 지위로서 누리는 만큼의 EU시장 접근성을 보장받기는 어려울 전망.

○ 영국의 EU예산 분담금 변화

- 영국재무부에 따르면 영국의 EU예산 순 분담금은 증가추세로, 2015년에는 약 84억 파운드를 순 분담해 독일, 프랑스에 이어 12.57%로 3번째 분담국
 - * EU 예산 순 분담률 순위 : 독일(1위, 21.36%), 프랑스(2위, 15.72%), 이탈리아(4위, 11.48%)
- 영국이 2018년까지 마무리해야 하는 EU와의 탈퇴 조건 협상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단 브렉시트가 가결됨에 따라 영국의 EU분담금은 대폭 줄어들거나 사라지게 될 예정임.
- EU예산을 미 분담하게 되면, 이에 상응하여 EU로부터 받고 있던 공동농업정책(CAP : Common Agriculture Policy)에 따른 농업 보조금, 연구개발기금 등의 수혜금도 받을 수 없게 됨.

<영국의 EU예산 분담금 추이>



자료원 : 영국재무부

<2015년 분담금 내역>

(단위 : 백만 파운드)

구분	금액
분담금	17,779
리베이트	4,861
실 분담금(a)	12,918
수혜금(b)	4,445
순분담금(a-b)	8,473

자료원 : 영국재무부

- 영국의 한 해 순 분담금이 85억 파운드 수준이기 때문에 여분의 재정을 사회기반시설 투자나 교육, 의료 등 사회복지에 전용할 수 있어 영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브렉시트 찬성캠프의 주장

○ 국제금융중심지로서의 영국의 위상 하락

- 영국 중앙은행을 비롯해 전 세계 주요 금융회사, 로펌, 회계법인 및 컨설팅사가 몰려있는 특별행정구역 '더 시티(The City)'는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런던 금융계를 지칭하는 의미로 통용될 정도로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영국의 위치는 절대적임.

-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외환거래 규모 및 장외 금리파생상품 거래규모 1위 국가는 영국

* 국가별 외환거래 규모 비중 (BIS, 2013년 기준) : 영국(40.9%), 미국(18.9%), 싱가포르(5.7%) 순

** 장외 파생상품 시장 규모 비중 (BIS, 2013년 기준) : 영국(48.9%), 미국(22.8%), 프랑스(7.2%) 순

***국제결제은행은 매 3년마다 주요국 중앙은행을 대상으로 세계외환 및 장외 파생상품시장 규모를 조사

- EU 금융거래에서 영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헤지펀드 자산의 85%, 외환거래의 78%, 장외 금리파생상품 거래의 74%로 영국을 제외한 EU국가들의 합보다 3~5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남.

<국제 금융시장 내 영국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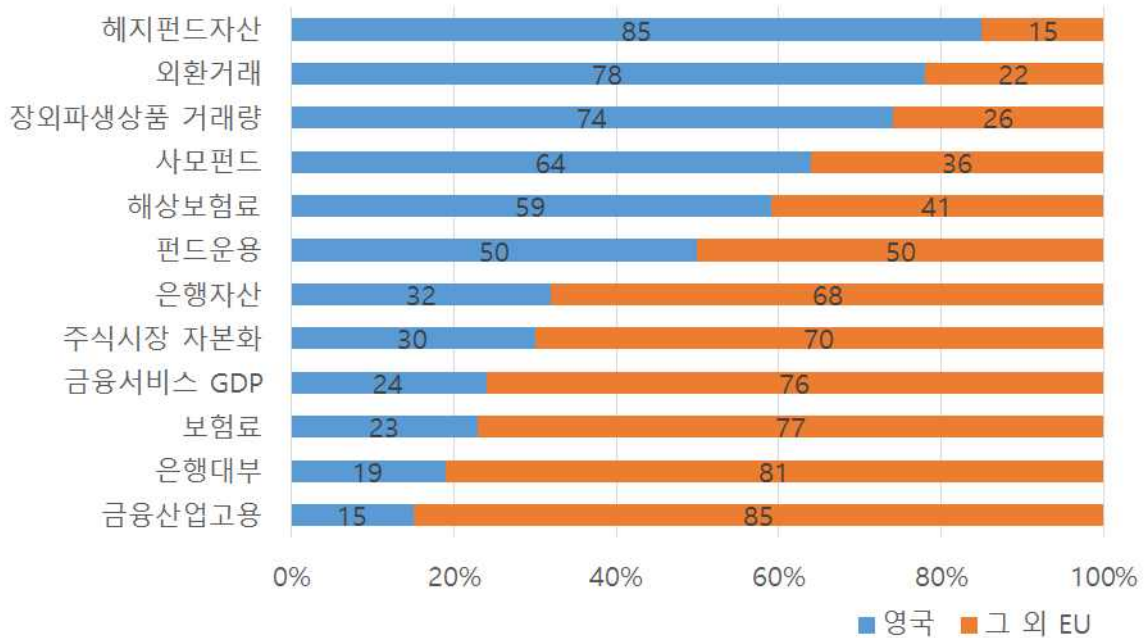
(단위 : %)

글로벌 시장에서의 비율(%)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싱가포르	홍콩	미국
장외파생상품 거래량(2013년 12월)	48.9	7.3	3.7	0.9	2.4	1.3	1.0	22.8
외환거래량(2013년 12월)	40.9	2.8	1.7	0.4	5.6	5.7	4.1	18.9
미국 증권 중 총 외환거래량(2014년 말)	20.1	5.6	1.1	-	0.9	0	1.2	-
해상보험 순보험료수입(2013년)	26	4	4	-	7	-	-	5
헤지펀드자산(2013년 말)	18	1	-	-	2	1	1	65
글로벌 증권 시장 및 교역 규모(2014년 말)	5.1	2.1	2.0	1.7	7.8	0.3	2.3	41.5

자료원 : Bruegel (BIS, EFAMA, SIFMA, TheCity UK 통계 인용)

- 글로벌 시장의 상호연계성에 따라 브렉시트가 국제금융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세계 및 EU 금융시장에서 영국의 위상이 위협받을 것이라는 EU잔류 지지자들의 우려가 현실화 될 수 있음.
- HSBC은행은 올해 초 영국이 EU 탈퇴 시 본사 비중의 20% (약 1,000명의 일자리) 줄여 파리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JP모건은 다른 투자은행들과 달리 영국 직원 수를 크게 줄이지 않았지만 영국과 유럽에서의 사업모델을 재편할 수밖에 없다고 밝힘.
- 이외에도 모건스탠리, 시티은행, 골드만삭스 등 EU '잔류'에 손을 들어준 금융·투자기업들의 구조조정 및 영국 이탈이 장·단기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음.
- 영국 파이낸셜 타임지(FT)는 Euronext 최고경영자인 스테판 보즈나 말을 인용, 전 세계 유로화 총액의 30~40%가 런던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브렉시트 이후 이러한 쏠림현상은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 전망하며, 프랑스를 비롯한 여타 유로국가들과의 금융권 본거지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됨.

<EU 금융시장 내 영국 비중>



자료원 : Blackrock

○ 영-미, 영-중 경제관계의 변화

- (영-미) 영국은 지리적으로는 유럽대륙에 속해 있으나 정치, 문화, 언어 등 다방면에서 미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영국이 EU의 회원국이라는 사실은 미국과 EU간의 정치적 연결고리로도 작용하고 있음.
- 따라서 클린턴 차기 미 대선주자를 비롯한 미국의 정치권에서는 영국의 브렉시트 반대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바 있으며, 특히 지난 2016년 4월 오바마 미 대통령은 영국 방문 시 연설을 통해 브렉시트가 영국에 정치적,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 오바마는 연설에서 브렉시트 시 궁극적으로 영-미 양자 간 무역 협상을 체결해야 하겠지만, 미국의 입장에서 영국보다는 EU와의 무역협정체결이 우선이기 때문에 영국과의 협상은 최대 10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고 언급함.

* 2013년 2월 미국과 EU는 공식적으로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체결을 위한 협상을 이어오고 있으며, 동 협정이 체결될 경우 전 세계의 약 47%를 차지하는 거대경제권이 탄생할 예정

- 미국은 2015년 기준 EU를 제외하면 영국의 2번째 교역상대국이나, 향후 TTIP가 현실화 된다고 하더라도 EU탈퇴로 그 수혜를 입지 못하게 됨. 이는 EU 회원국들이 미국시장에서 받게 되는 무관세 등의 혜택을 영국 기업들은 받을 수 없다는 것으로 영국 수출에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음.
- 따라서 영국은 이에 대비하여 EU와의 탈퇴협상 이외에도 미국과의 경제 관계 재정립에 힘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임.
 - * 현재 TTIP는 프랑스 등의 강력한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으나 미국 행정부가 교체되기 전에 동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하면 사실상 협상타결이 어려울 것이라는데 EU집행위와 오바마 행정부가 의견을 같이 하여 적극 추진 중에 있음.
- (영-중) 중국의 해외투자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2000~2014년까지 중국이 EU역내에 투자한 금액은 460억 파운드 그 중 최대 투자 목적지는 영국
- 교역에서도 중국은 2015년 기준 EU를 제외하고 영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으로 양국 경제관계는 투자와 교역 모두에서 중요
- 특히 캐머런 정부는 2013년 12월 영국 주요기업인 Barclays Bank, British Petroleum, Rolls-Royce 등으로 구성된 경제사절단과 중국을 방문하는 등 중국과의 교역관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
- 영-중 관계는 2015년 10월 중국 시진핑 주석의 영국 방문을 계기로 원전을 포함한 부동산, 전력 등 다방면의 협력 확대와 런던 금융시장에서 위안화 국채발행, 양국 간 통화스왑 확대 등에 대한 합의를 이루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됨.
 - * 영국일간지 FT의 분석에 따르면 캐머런 정부가 세운 2020년 정부재정 흑자 전환 목표로 인해 기반시설에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하며, 경기침체 이후 은행들도 이와 같은 시설에 투자하기를 꺼려하고 있어 중국을 가장 유력한 투자 국가로 지목하고 있다고 함.
- 중국은 EU와 FTA를 체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도 영국 제품의 對중국 시장접근성에 있어 관세율 인상 등의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지만 브렉시트 가결로 인해 중국 투자자들의 EU내 다른 국가로의 이탈은 우려되고 있음.

- * 지난 2월 중국의 제일 큰 부동산 개발업자인 왕건림(Wang Jianlin), 영국 방문 시 “브렉시트는 영국에 득이 되지 않고 투자자들에게 많은 장애물과 도전과제를 만들어낼 것이며, 영국에 있는 많은 중국 회사들이 유럽 본사를 타 유럽 국가들로 옮기게 될 것이다.” 라는 발언을 하며 영국이 유럽에 잔류하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표한바 있음.
- 중국정부도 브렉시트가 영국의 투자유치에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고 비자강화 등으로 인해 관광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영국의 EU잔류에 찬성의견을 표명, 중국정부가 제3국 내부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음.

<중국의 EU내 투자 목적지>



자료원 : Financial Times

<중국의 OFDI 추이 및 전망>



자료원 : Financial Times

- 한편, 브렉시트로 인한 EU규제 미적용이 對중국 무역수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 보는 시각도 있음. 영국 철강 산업의 경우 중국산과의 가격 경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중국산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는 영국이 EU회원국으로서 독자적으로 시행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유럽 제2의 철강기업인 타타스틸(Tata Steel)의 영국 사업 매각결정으로까지 이어졌다는 주장임.
- * 미국의 경우 중국산 강철에 대한 반덤핑 조치로 수입관세가 266%에 달하는 반면, EU는 불과 24%만을 부과하고 있어 EU의 對중 제재는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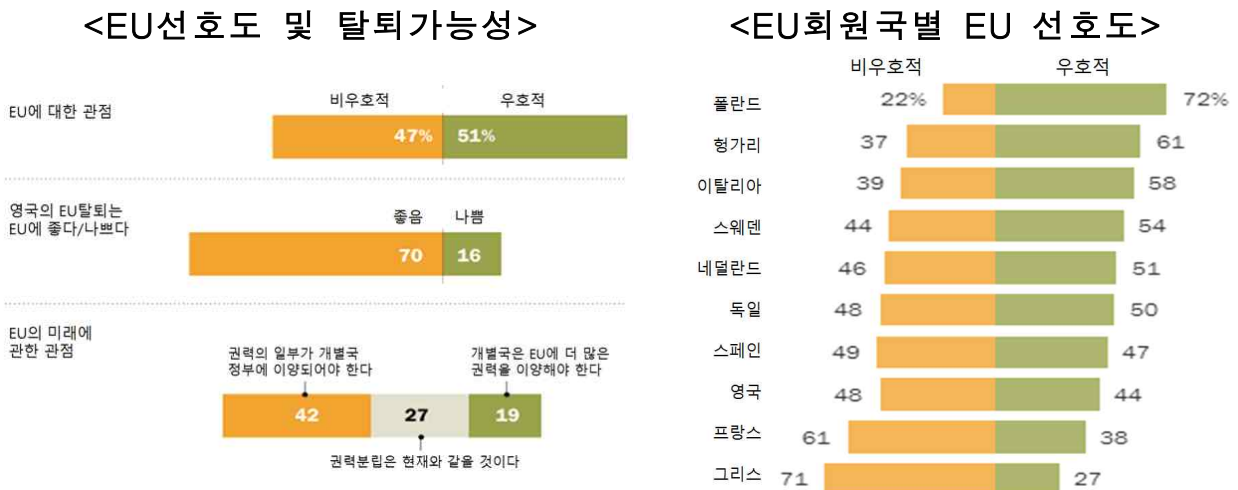
3. 정치 분야

- 영국의 EU통합 강화에의 비참여 및 주권 강화
 - 영국은 EEC에 가입한 1973년부터 회원국 지위에 대한 국민들의 선호가 회원국 평균에 비해 지속적으로 낮았으며, 현 집권당인 보수당도 EU통합에 대한 회의론자와 찬성론자의 갈등이 지속되어 왔음.
 - 더불어 마스트리히트 조약과 리스본 조약의 전신인 EU헌법조약 등 EU 통합 관련 주요 조약들에 대한 국민적 합의(국민투표)가 없었음
 - * 프랑스, 덴마크, 아일랜드는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관한 국민투표(1992년), 프랑스와 네덜란드는 헌법조약에 대한 국민투표(2005년) 실시하였음.
 - 최근의 경기침체, 난민문제 등에서 불거진 정부에 대한 불만이 EU 회의론으로 번지면서 캐머런 총리가 총선 공약으로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내걸게 되었다는 의견이 우세함.
 - 유럽회의론의 정치적 핵심은 영국의 주권에 대한 EU의 제한이 지나치게 많아 국경통제를 비롯해 자국에 경제적, 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문제에 대해서도 영국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임.
 - 영국은 유럽통화동맹(EMU: European Monetary Union), 신재정협약(European Fiscal Compact) 등 EU의 주요 통합정책에서 자발적 제외(opt-out)를 선택한 바 있으나, 이정도로는 유럽 회의론자들의 불만을 해소시키지 못함.
 - 캐머런 정부는 EU잔류를 위한 조건협상에서 좀 더 강력한 EU제정 법률거부권(red card)과 더욱 긴밀한 공동체(ever-closer-union) 조항에서 영국을 명시적으로 제외시킬 것을 요구, 향후 영국이 EU의 한 단계 높은 통합에서 제외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회의론자들을 회유코자 하였으나 이번 투표결과로 이 또한 충분치 못했던 것으로 평가됨.

- 이번 결과로 영국은 EU에서 탈퇴하는 최초의 회원국이 되면서 정치, 경제적으로도 독자적 결정권한을 갖게 되며, 이에 따라 영국은 국경통제강화를 비롯해 다방면에서의 변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영국 내 정권 교체 가능성
 - 브렉시트 논의가 시작된 이후 영국의 정권 교체가능성은 정치권의 주요 이슈가 되어옴. 카메론 총리는 2016년 2월 EU와의 잔류협상 이후 브렉시트가 가결되더라도 총리직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보수당 내 차기 유력 총리후보인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 전 런던시장이 공개적으로 탈퇴 지지를 선언하며 대결구도를 이어온 점을 감안했을 때 총리직을 사퇴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임.
 - 영국 경제문제연구소(IEA: The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의 라이언 본(Ryan Bourne) 공공정책 담당관은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영국이 잔류를 선택했다면 캐머런 총리는 탈퇴 지지자들을 내각에 임명해 사후 정치적 통합을 시도할 수 있었겠지만, 현재로서는 정치적 분열에 대한 대안이 없을 것이라고 평가함.
- 스코틀랜드 독립 재추진 가능성
 - 스코틀랜드 집권 여당인 스코틀랜드민족당(SNP)은 2014년 9월의 국민투표로 독립이 부결된 이후에도 재투표를 추진했으나 정치적 반발로 인해 무산된 경험이 있으며, 현 스코틀랜드의 실권자인 니콜라 스터전(Nichola Sturgeon) 제 1장관은 2015년 12월에도 투표 재추진을 “거부하지 않겠다.”라고 발언, 당론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
 - 스코틀랜드는 영국의 브렉시트가 자국의 EU회원국 지위 자동 상실을 의미하므로 브렉시트를 막고자 하는 잔류론이 지배적이었으며, Panelbase의 2016년 4월 여론조사에 따르면 스코틀랜드 국민 63%가 잔류를 지지하고 있었음. 또한, 브렉시트시 독립을 찬성한다는 여론도 52%였음.

- 금번 브렉시트 가결로 스코틀랜드 내 독립 재투표에 대한 여론이 거세질 것으로 보이며, 2014년 독립투표 당시 44.7%대 55.3%로 부결되었던 것을 감안하면 브렉시트라는 큰 변수가 실제 독립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언급되고 있는 상황임.
 - SNP의 전 당수인 알렉스 새먼드(Alex Salmon)는 브렉시트 관련 TV토론에서 스코틀랜드의 독립투표는 영국의 EU탈퇴 협상기간인 2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며 스코틀랜드는 자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EU를 탈퇴하게 됨에 따라 재투표가 진행된다면 이번에는 가결될 것으로 본다고 언급함.
 - 영국인들은 스코틀랜드의 독립을 반대하는 입장으로, 2016.5월 BMG 여론조사를 보면 68%가 브렉시트보다 스코틀랜드의 독립을 더 심각하게 보는 것으로 나타남. 이들은 EU와의 관계보다 300년을 지속해온 스코틀랜드와의 동맹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임.
- 외교·안보 분야 영국의 영향력 변화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는 1949년 북대서양조약을 기초로 미국, 캐나다와 영국을 포함한 유럽 12개국에 참가해 만든 집단안전보장기구로 영국은 매년 GDP의 2%를 NATO예산으로 분담하고 있음. 영국 국방비 예산은 NATO 회원국 중에서 미국 다음으로 높은 2위이며 미국과의 우호관계로 인해 NATO에서의 영국 입지는 매우 높은 편임.
 - 영국이 정치·안보 문제에서 유럽과 미국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은 브렉시트를 반대해 왔으며 이러한 시각은 미국의 영향력이 큰 NATO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취리히 안보연구센터(Centre for Security Studies at ETH Zurich) 코한(Daniel Keohane) 연구원에 따르면, 5명의 전직NATO 사무총장 모두 브렉시트를 반대했으며, 사유는 EU내 프랑스와 독일의 정치적 입지가 강화되면서 유럽 안보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

- 그러나, 영국의 노동당 전 내무장관 찰스 클라크(Charles Clarke)와 전 경찰청장 피터 네이로드(Peter Neyroud)는 영국이 EU를 탈퇴하게 됨으로써 기밀 정보요원 간 관계에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며, 이로써 영국은 NATO에서의 입지 강화에 더욱 노력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함.
- 유럽통합 회의론 강화 및 여타 EU 국가의 탈퇴여론 확산
 - 2012년 유로존에서 시작된 경제위기와 최근의 난민사태는 EU전역에서 통합에 대한 회의론을 대두시키고 있음.
 - 최근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에서 EU 1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주권이 어느 정도 회원국 정부로 재 이양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42%에 달하며, 영국을 비롯한 프랑스, 스페인, 독일 등 주요국의 EU 비 선호 응답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일각에서는 EU회원국들의 탈퇴 행렬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 * 2016년 2월 체코 총리도 브렉시트 시 체코의 EU탈퇴 움직임 가능성 언급한 바 있으며, 영국 일간지 Telegraph의 2016년 2월 보도에 따르면 체코 국민의 62%가 탈퇴를 찬성



자료원 : Pew Research Center(Spring 2016)

- 동 조사결과 EU 핵심국인 독일, 프랑스를 비롯한 전 응답국이 EU가 난민문제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독일과 폴란드를 제외한 전 국가가 경제 문제에서도 EU가 잘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해 EU에 대한 불신이 높았음.
- * 설문대상 10개국 : 그리스, 프랑스, 영국, 스페인,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이탈리아, 헝가리, 폴란드

4. 사회 분야

○ 이민자 유입 통제 및 복지혜택 제한

- 브렉시트 논쟁의 핵심에는 영국의 국경통제권 회수에 의한 이민자 통제가 있었던 만큼 이번 가결로 인해 영국의 이민자 통제 및 이민자 복지혜택 제한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됨.
- 당초 캐머런 총리는 EU잔류를 위한 EU집행위와의 협상에서 영국의 연간 순 이민자수가 30만 명에 달해 학교와 병원 등 여러 공공서비스에 심각한 부담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 대안으로 이민자 복지 제한을 요청해 고용 후 4년 간 근로복지혜택 제한이 수용됨.
- 브렉시트 찬성 측에서는 이민자 감소에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강력히 비난한 바 있음. 따라서 향후 EU와의 협상에서 수용된 조건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이민자 복지혜택이 제한될 가능성이 큼.
 - * 영국 순 이민자수 추이 : 17.7만(2012) → 20.9만(2013) → 31.8만(2014) → 33.3만(2015)
- 브렉시트 가결로 EU역내 거주자의 자유가 영국에 더 이상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 EU내 이주자들도 영국의 이민통제를 받게 됨.
- 대표적 브렉시트 찬성론자인 보리스 존슨 전 런던시장은 현재 역외국에만 작용되고 있는 호주식 포인트제도 기반 이민시스템(Australian -style points based immigration system)을 역내에도 도입할 것을 제안한 바 있는데, 탈퇴가 결정됨에 따라 EU출신 이주자들도 현재 역외국 이주자처럼 비자형태에 따라 입국 제한을 받게 됨.

○ 난민 문제에서의 강경한 대응과 국경 통제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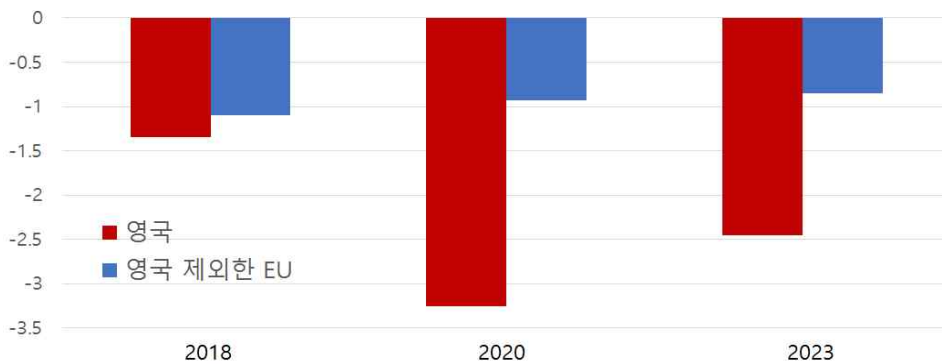
- 영국과 아일랜드를 제외한 EU지역은 국가 간 통행의 자유를 보장하는 쉥겐조약(Schengen Agreement)에 대부분 가입되어 있으며, 이는 최근 시리아 발 난민문제가 전 유럽에서 이슈가 되었던 요인이기도 함.

- 유럽지역 난민들은 대부분 지중해를 건너 그리스, 이탈리아, 터키 등 남부유럽 국가를 통해 유입되지만, 동 조약에 의해 일단 쟁쟁 가입국으로 입국한 난민들은 다른 쟁쟁 가입국으로의 통행의 자유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임.
- 이 때문에 최근 국경통제 강화의 문제는 비단 영국만의 문제가 아니며, 영국은 쟁쟁조약 미가입국으로 상대적으로 난민문제에 소극적일 수 있었으나, 독일과 프랑스 등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난민 관련 책임을 분담하라는 압력을 받아 왔음. 이번 브렉시트로 이러한 부담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영국의 입장에서 브렉시트로 인한 국경통제는 아일랜드와의 국경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유럽과 영국을 잇는 최대 통로인 유로터널의 경우 영국 측에서 국경통제를 더욱 강화할 수 있지만, 영국과 공동여행구역(CTA: Common Travel Area)을 운영하고 있는 아일랜드의 경우 현재 양국 간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EU출신 이민자들이 영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또 다른 관문이 될 수 있어 국경통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III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

- (무역) 유럽 및 글로벌 정치·경제·사회 불안요소 가중으로 인한 무역 위축
 - 2015년 기준 영국의 GDP는 약 2.9조 달러로 세계 5위 수준이며, 교역규모도 약 1조 달러로 EU를 제외한 개별국가로는 세계 5위를 차지하고 있는 글로벌 교역에서 중요한 시장으로 교역의 약 45%가 EU역내 교역에서 발생하고 있음.
 - 하지만 브렉시트로 인해 금융시장 불안, 기업의 투자위축, 시장수요 감소 등으로 회복세를 타던 유럽 경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
 - 브렉시트로 인한 교역감소는 단기적으로 EU 역내교역에서 가장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 영국은 파운드화 가치하락에 따른 교역 조건 악화가, EU는 영국산 중간재 수입과 對영국 수출비용 증가가 직접적인 원인이 될 것.
 - 영국이 더 이상 EU분담금을 내지 않게 됨에 따라 독일, 프랑스 등 EU주요국의 재정부담 가중이 산업별 지원감소로 이어질 경우 EU의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더해질 가능성도 있음.
 - 2015년 EU의 對영국 수출비중이 7.1%에 불과하기 때문에 EU가 받게 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이나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933억 유로에 달하기 때문에 EU도 부정적인 영향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 OECD의 실질GDP 예측에 따르면 영국의 단기적 성장률 감소폭은 EU감소폭의 3배 이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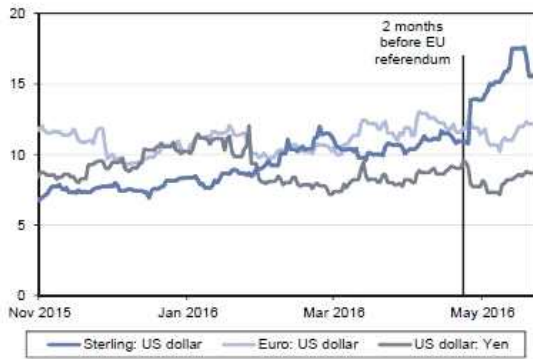
< 당초 영국경제 성장률 추이 및 전망 >



자료원 : EU집행위(2015.11월 발표치)

- 인도 등 신흥국의 경우 자국 고급인력의 영국 노동비자 발급 등 노동시장에서의 강화된 접근권한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브렉시트 찬성론자들은 비자발급 요건 강화를 주장하여 해당 문제의 원만한 해결이 관건이라 예측됨.
- (금융)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 영국 재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브렉시트 이후에 대한 영국경제 재평가가 빠르게 진행되어 1) transition effect : EU 탈퇴에 따른 교역 및 금융 부분의 대외개방도 하락 및 생산성 저하에 의한 전환 효과, 2) uncertainty effect : 소비 위축, 투자 하락 및 금융시장의 리스크 프리미엄 확대 등 시장의 불확실성 효과, 3) financial conditions effect : 금융 시장에서의 변동성 확대 효과가 복합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
 - 특히 국제금융시장의 상호연계성 및 국제금융거래에서 차지하는 영국의 영향력을 고려하면, 브렉시트發 충격은 외환, 자산, 채권시장별로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에 전이될 가능성이 높음.
 - i) 외환시장, 파운드화 가치급락 및 불확실성 확대
 - 올 2월 블룸버그 통신이 경제학자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결과와 같이, 파운드화의 가치는 단기적으로 몇 개월 혹은 단 몇 주 만에 10%이상 하락할 수 있음.
 - 극단적으로는 1985년 수준인 1파운드 당 1.35달러까지 하락할 가능성도 열려있으며,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유로화의 동반 하락 및 달러화 강세가 촉발되어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음.
 - ii) 자산시장, 파운드화 자산가치의 평가절하에 따른 자금이탈
 - 파운드화로 표시된 자산가치 하락은 소비심리 위축 및 해외투자자들의 집단이탈로 이어질 수 있음.
 -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와 같이 자산운용 펀드에 대한 단기간 환매 요청이 집중될 수 있으며, 해외 운용자산(AUM : Asset Under Management)이 영국 시장에서 급속히 빠져나가 국제금융시장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음.

<달러대비 파운드, 유로, 엔화 변동성 추이>



자료원 : 영국 재무부

<자산 가치 예측지표 변동 추이>



자료원 : 영국 재무부

iii) 채권시장, 안전자산에 대한 쏠림현상 발생

- 금융자산에 대한 불안감 확산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수요가 급등할 것으로 전망됨.
- 투표 직전 여론조사에서도 브렉시트 찬성이 반대보다 앞선다는 언론 보도가 발표되고 브렉시트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자마자 대표적 안전 자산으로 분류되는 독일, 일본 등 주요국 국채 금리가 일제히 하락
- 총 100조 달러가 넘는 독일의 10년물 국채금리는 사상 처음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으며, 일본 국채 금리도 사상 최저치 기록.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브렉시트 현실화에 따라 엔화가치가 달러당 100엔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 하며, 엔고 부담에 따른 일본 증시 동반 하락을 우려하기도 함.

○ (투자) 영국, EU로부터 투자자금이탈 및 글로벌 투자위축 발생 가능성

-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인 S&P와 무디스는 모두 브렉시트 시 영국의 국가신용등급 하락을 경고한 바 있음.
- 특히 S&P에 따르면 영국은 수출과 금융서비스 부문의 타격으로 인해 쌍둥이적자(Twin Deficit) 폭이 심화되고 외국인 투자 감소와 자본 유출 현상 심화로 파운드화의 심각한 약세를 가져와 파운드화의 준비통화로서의 지위도 위협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신용등급 하락을 경고함.

* 쌍둥이 적자란 경상수지 적자와 재정수지 적자가 동시에 발생하는 현상

** 준비통화(reserve currency)란 각 국이 대외지급을 위한 준비로서 보유하고 있는 통화

- 브렉시트로 실제 영국의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하고, EU내 타 회원국에서도 EU회의론이 급부상함에 따라 탈퇴요구 증가가 이어지게 되면 영국은 물론 EU로부터의 투자자금 유출도 우려되고 있음.
 - 중국의 경기둔화, 일본의 제로금리, 미국의 금리인상 시기 지연 등의 이유로 단기적으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으로 인해 글로벌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음.
 - 영국 Global Council의 'BREXIT : the impact on the UK and the EU'에 따르면 EU역외국 기업의 본사 중 50%는 영국에 소재하고 있으며, 이는 독일, 프랑스, 스위스, 네덜란드에 위치한 EU역외국 본사를 합친 것보다 많은 수치임
 - 영국에 본사가 많은 이유는 영어 사용이라는 언어적 편리함과 함께 영국이 EU시장의 관문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임. 따라서 브렉시트로 인해 EU역외기업 본사의 EU내 회원국으로의 이전도 가시화 될 전망이다.
 - 또한, EU내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지침인 'Parent Subsidiary Directive'가 영국에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게 됨에 따라 영국에 모회사 또는 자회사를 두고 있는 EU역내 기업의 EU내 회원국으로의 이전도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됨.
 - 한편, 도이치은행(Deutsche Bank)의 자료에 따르면 영국은 동남아시아 등 신흥국 투자가 많은 상위 5개 국 중 하나로, 영국의 경기하락은 영국의 해외투자 감소로 나타나 아시아 국가들의 투자유입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유럽회의론) 연쇄적 EU 탈퇴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 확대 가능
- 체코, 그리스 등 기존 EU 탈퇴 입장을 보였던 국가들이 브렉시트를 계기로 연쇄적으로 EU탈퇴를 추진할 여지가 다분
 - 최근 EU의 경기 회복세에 급제동이 걸리는 동시에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 상존

IV 한-영 관계에 미치는 영향

□ 한-영 무역 동향 및 위축 가능성

- 2015년 기준 한국의 對영국 수출은 약 74억 달러(21위 수출대상국), 對영국 수입은 약 61억 달러(16위 수입대상국)로 한국은 영국에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약 12.6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

< 한국 무역에서의 영국 비중(2015년) >

(단위 : 백만 달러)

순위	주요수출국	금액	순위	주요수입국	금액
	총수출액	526,756		총수입액	436,498
1	중국	137,123	1	중국	90,250
2	미국	69,832	2	일본	45,853
3	홍콩	30,418	3	미국	44,024
16	영국	7,390	18	영국	6,127

< 영국 무역에서의 한국 비중(2015년) >

(단위 : 백만 달러)

순위	주요수출국	금액	순위	주요수입국	금액
	총수출액	459,903		총수입액	626,503
1	미국	66,524	1	독일	92,715
2	독일	46,360	2	중국	61,213
3	스위스	32,222	3	미국	57,406
13	한국	6,975	22	한국	6,278

자료원 : 관세청

- 그러나 이는 저유가로 인한 한국의 對영수입 최대 품목인 원유의 교역가치 하락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2011년 이후 3년간은 지속적인 무역수지 적자였음.

< 한국의 對영 주요 교역 품목(2015년) >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수출			수입		
	품목	금액	증가율	품목	금액	증가율
1	선박	2,277	447.9	원유	1,395	-47.4
2	승용차	1,499	4.3	승용차	782	56.5
3	집적회로반도체	512	10.4	의약품	259	-4.6
4	항공기부품	287	108.4	주류	188	-4.1
5	해양구조물	250	-	펌프	171	35.7

자료원 : 관세청

- 양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상호 교역비중 낮은 편
 - 2013년 11월 한-영 정상회의시, 2020년까지 양국 간 무역 및 투자를 2배 확대하기로 합의

<최근 5년간 한-영 수출입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對영 수출	4,969	4,897	4,727	5,783	7,390
(증가율)	-10.5	-1.4	-3.5	22.3	27.8
對영 수입	3,818	6,360	6,194	7,447	6,127
(증가율%)	16.9	66.6	-2.6	20.2	-17.7
무역수지	1,151	-1,463	-1,467	-1,664	1,263

자료원: 관세청

- 그러나 브렉시트 타결로 인해 양국 간 별도 무역협정 없이는 경제 교류 확대가 쉽지 않을 전망
 - 향후 영국은 한-EU FTA에서 정한 EU의 시장개방약속에서 제외되면서 우리기업들은 영국 경제 변동성 확대에 따른 파운드화 평가절하 및 수익성 악화, 특혜관세 미적용에 따른 가격경쟁력 저하를 우려
 - KOTRA 런던 무역관에서 현지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87%가 브렉시트에도 영국에 잔류할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65%가 한-영 양자 간 FTA 체결 없이 영업활동의 부정적인 영향을 견딜 수 있는 기간이 2년 미만이라고 답해 브렉시트 후 현지잔류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특정기업의 경우 영국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체코, 터키산 제품에 비한 가격경쟁력 확보가 관건이기 때문에 브렉시트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1년도 버티기 힘들 것이라 응답함.
 - 영국 경제사회연구소(NIESR : National Institution of Economic and Social Research)의 거시경제 담당자 Angus Armstrong은 브렉시트에도 한국기업들이 영국에서 바로 철수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금융 헤징을 통해 위험에 대비하고, 신용평가기관들이 영국의 신용도 하락을 경고하고 있는 만큼 대출이 필요한 경우 서두르는 것이 좋다고 조언

- 이중적 무역제한 가능성
 - 영국이 독자적으로 비관세장벽을 통해 수입규제 정책을 편다면 현지 진출 기업들은 유럽시장에서 EU시장과 더불어 이중적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는 우리기업들에게 이중고로 작용할 것임.

□ 한-영 투자 동향 및 위축 가능성

- (영국의 對韓투자) 2015년 영국의 對한 투자는 2억 6천만 달러(신고기준)
 - 주요 산업분야는 1위 금융 및 보험업(1억1,138만 달러), 2위 화학 공업(7,850만 달러), 3위 의약(2,290만 달러), 4위 비즈니스서비스업(2,258만 달러), 5위 유통업(1,779만 달러) 순임.

< 영국의 對韓 투자 동향 >

(단위: 건, 천달러)

연도	제조업		서비스업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1	10	170,087	67	298,438	79	918,614
2012	13	179,400	60	181,319	74	360,811
2013	11	65,373	56	49,594	68	115,876
2014	18	228,975	60	203,352	79	432,424
2015	16	104,743	47	154,070	63	258,813

자료원 : 산업부

- 영국의 對한국 투자는 대부분이 금융을 포함한 서비스업에 집중
 - * 실제 영국으로부터의 투자유입은 레고랜드 코리아를 건설 중인 M사의 2014년 증액투자를 제외하면 그린필드형 투자가 거의 없고 대부분 재무적 투자와 기업 M&A가 주를 이룸.
- (한국의 對영투자) 2015년 한국의 對영 투자는 총 48건, 8억 9천만 달러(신고기준)
 - 주요 산업분야는 1위 미디어 및 통신업(3억 2,253만 달러), 2위 광업(3억 902만 달러), 3위 금융 및 보험업(1억 2,452만 달러), 4위 제조업(5,046만 달러), 5위 건설업(400만 달러) 순임.

< 한국의 對영국 투자 동향 >

(단위 : 건, 천달러)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2011	58	17	1,183,914
2012	53	8	464,360
2013	49	17	556,027
2014	42	14	1,019,802
2015	48	19	892,271

자료원: 수출입은행

- 영국은 세계 2위 서비스산업 수출국이자 서비스산업이 영국 총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80%일 정도로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높아, 브렉시트 가결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 또한 금융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 분야에서 가장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됨.
-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부 장관은 브렉시트로 인해 서비스 산업에서만 적어도 40만 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언급
- 영국 서비스산업의 둔화는 영국 기업의 해외투자 둔화 또는 급감으로 나타나 對한국 투자 역시 감소할 가능성이 높음.

V

브렉시트 관련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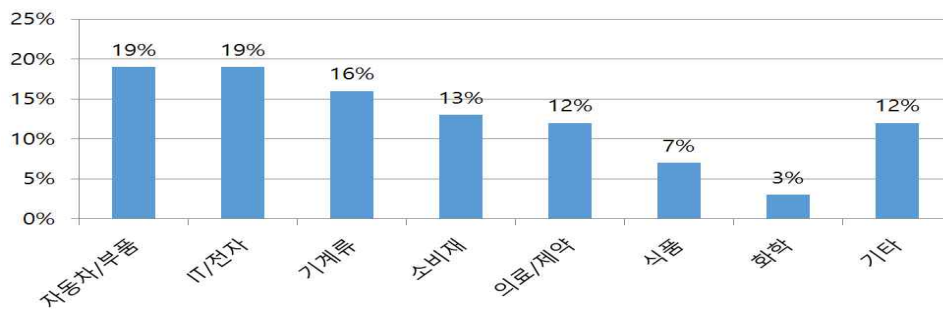
1. 유럽 현지 바이어 대상 설문조사

□ 브렉시트 영향 설문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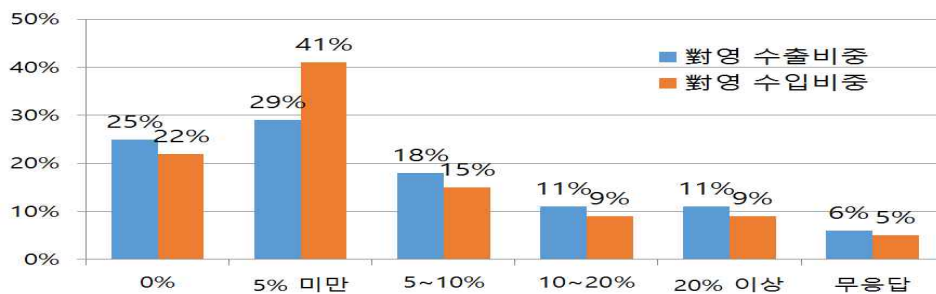
○ 설문대상 : VW, Jaguar 등 유럽지역 19개국, 103개 현지 바이어(제조업 분야)

국가	무역관	업체수	국가	무역관	업체수
독일	프랑크푸르트	5			
	함부르크	8			
	뮌헨	4			
영국	런던	5	덴마크	코펜하겐	4
프랑스	파리	6	핀란드	헬싱키	3
이탈리아	밀라노	4	그리스	아테네	4
스페인	마드리드	7	체코	프라하	4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8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5
스웨덴	코펜하겐	4	헝가리	부다페스트	6
폴란드	바르샤바	5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	3
벨기에	브뤼셀	6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6
오스트리아	빈	3	불가리아	소피아	3
총계	103개사				

- 기간 : 2016년 6월 9일 ~ 6월 16일
- 도구 : 구조화된 설문지 (Structured Questionnaire)
- 방법 : 전화 및 이메일
- 응답기업 사업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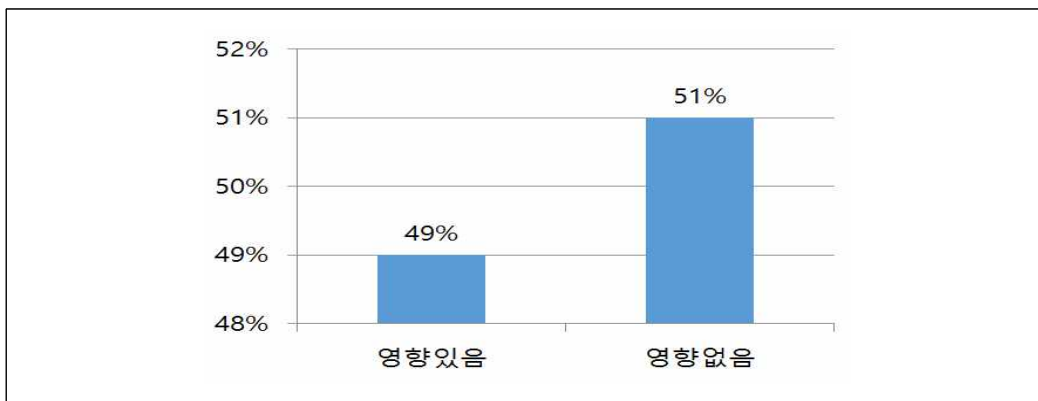
○ 응답기업 영국과의 교역현황(對영국 수출입비중/對EU총수출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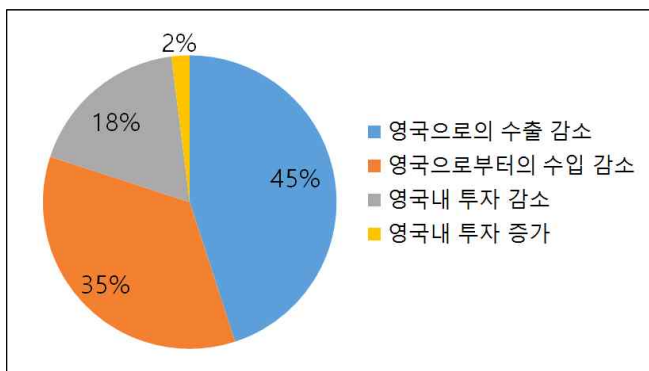
□ 설문내용 및 응답결과

- (Q1. 브렉시트가 비즈니스에 단기영향(향후 2년 내) 미치는지 여부) 브렉시트가 자사 비즈니스에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답변한 기업은 50개사로 49%에 달했고, 단기적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답변한 기업은 51%로 나타남.
- (Q2.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 브렉시트의 단기적 영향이 있다고 답한 5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질문에서는 영국으로의 수출 감소를 45%, 영국으로부터의 수입 감소를 35%, 영국 내 투자 감소 18%, 영국 내 투자 증가 2%라 응답. 따라서 브렉시트로 인해 對영국 수출입 감소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남.
- (Q3. 부정적 영향의 정도) 브렉시트로 인해 매우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28%, 부정적 40%, 큰 타격 없음은 32%로 드러남. 68%의 기업이 브렉시트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부정적 응답 사유로는 80%가 '관세율 인상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를 들었으며, 부정적 영향이 높다고('매우 부정적', '부정적') 답한 바이어의 55%가 영국과의 비즈니스를 점차 줄일 계획으로 답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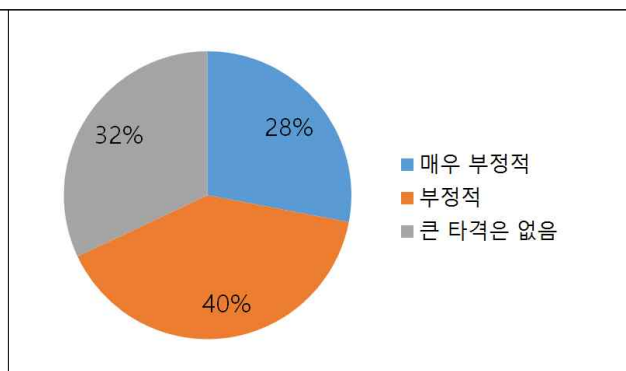
<브렉시트가 자사 비즈니스에 단기적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비즈니스에 대한 영향>



<부정적 영향의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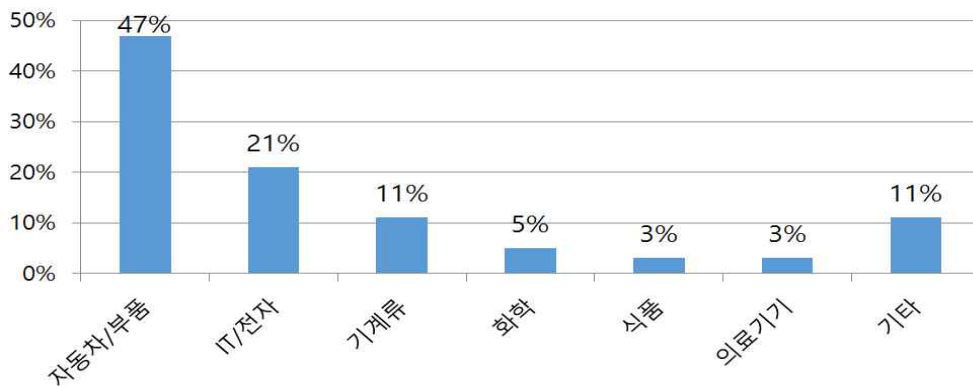
2. 유럽 진출 우리기업 지상사 대상 설문조사

□ 브렉시트 영향 설문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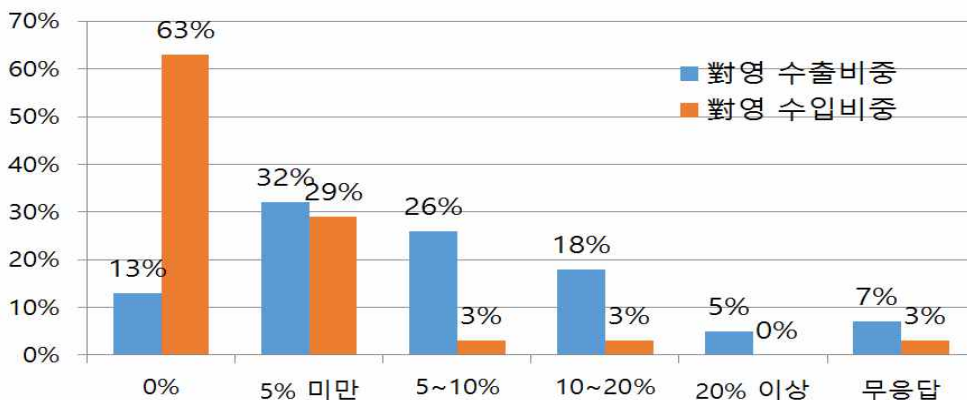
- 설문대상 : 삼성, 현대, LG등 유럽지역 12개국, 38개 지상사

국가	무역관	업체수	국가	무역관	업체수
독일	프랑크푸르트	10	스웨덴	스톡홀름	1
	함부르크	1	핀란드	헬싱키	2
	뮌헨	2	폴란드	바르샤바	4
이탈리아	밀라노	2	오스트리아	빈	2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6	그리스	아테네	2
체코	프라하	1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	2
헝가리	부다페스트	2	스페인	마드리드	1
총계	38개사				

- 기간 : 2016년 6월 9일 ~ 6월 16일
- 도구 : 구조화된 설문지 (Structured Questionnaire)
- 방법 : 전화 및 이메일
- 응답기업 사업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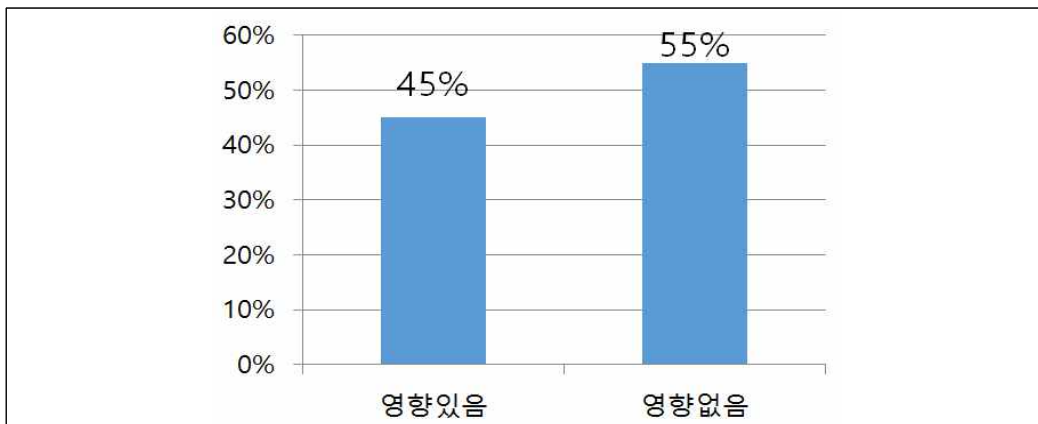
- 응답기업 영국과의 교역현황(對영국 수출입비중/對EU총수출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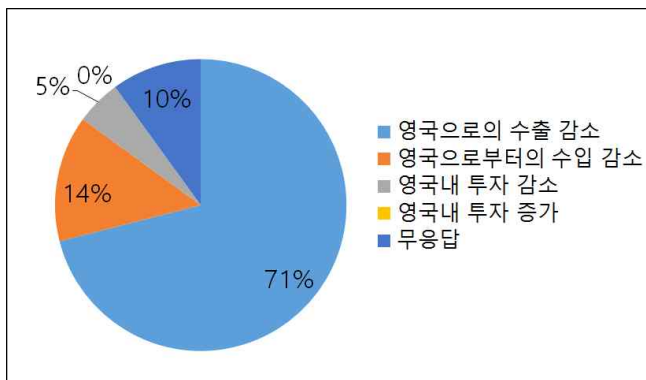
□ 설문내용 및 응답결과

- (Q1. 브렉시트가 비즈니스에 단기영향(향후 2년 내) 미치는지 여부) 브렉시트가 자사 비즈니스에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답변한 기업은 총 38개사 중 17개사(45%)였고,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답변한 기업은 21개사(55%)로 나타남.
- (Q2.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 브렉시트의 단기적 영향이 있다고 답한 한국 지상사 17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질문에서는 영국으로의 수출 감소를 가장 우려하는 것(71%)으로 나타났다. 영국으로부터의 수입 감소는 14%, 영국 내 투자 감소 5%, 영국 내 투자 증가 0%라 응답했다.
- (Q3. 부정적 영향의 정도) 브렉시트로 인해 매우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6%, 부정적 71%, 큰 타격 없음은 24%로 드러남. 따라서 77%의 기업이 브렉시트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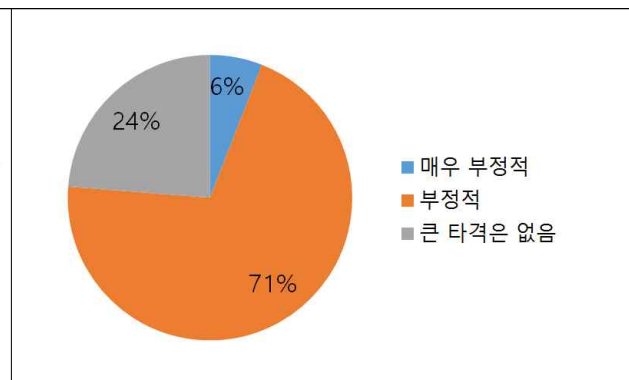
<브렉시트가 자사 비즈니스에 단기적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비즈니스에 대한 영향>



<부정적 영향의 정도>



- 부정적 응답 사유로는 53%가 영국의 EU회원국 지위 상실로 인한 '상이한 인증 및 규제'를 꼽았으며, 41%가 '관세율 인상에 따른 가격 경쟁력 약화'를 지목함.
 - * 독일 진출 지상사(자동차부품) : “리스크 헤징 차원에서 영국으로의 수출시 USD로 계약체결을 하는 관계로 파운드화 약세에 따른 영향은 미미. 또한 제3국 관세가 적용되더라도 자사 취급 품목에 부과되는 관세는 1% 미만이라 영업활동에 큰 지장은 없을 것. 가장 큰 우려점은 상이한 인증/규정에 대응하는 것임”이라 밝힘.
- 부정적(매우 부정적 및 부정적)으로 답한 지상사 중 자동차/부품 업종이 50%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IT/전자 19%, 화학업종이 13%를 차지. 부정적 영향이 '매우 높음'이라 응답한 지상사는 1개사(전자제품)로 현재 영국에 대한 수출물량이 EU에 대한 총 수출물량 중 5~10%를 차지
 - * 네덜란드 진출 지상사 L사(전자제품)은 “가격경쟁력에 민감한 제품인 관계로, 제3국 관세 부여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 우려. 브렉시트시 영국에 대한 수출물량이 줄어들 것에 대비하여, EU역내 회원국에 대한 마케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

3. 영국 진출 우리기업 대상 설문조사

□ 브렉시트 영향 설문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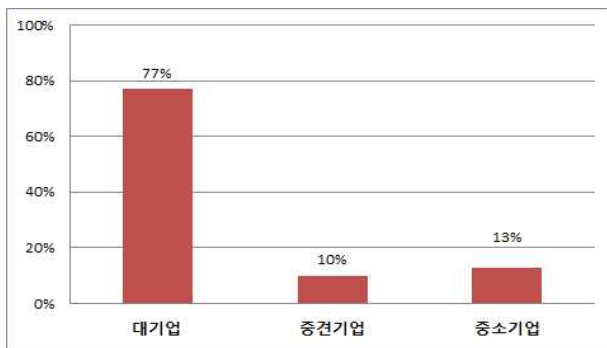
- 설문은 공공기관과 언론사를 제외한 진출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이 중 31개사가 설문에 응답.
- 영국 내 우리 진출기업은 100여 개 사로 대부분이 판매법인

<영국 진출 우리기업 업종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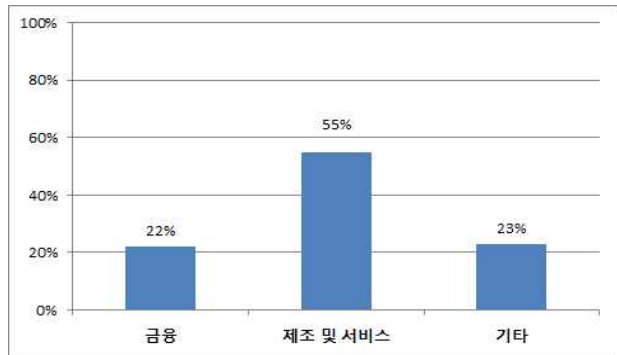
	업종	진출기업수
1	도소매업	46
2	금융보험업	19
3	운수업	11
4	공공기업	10
5	건설업	2
6	광업	2
7	기타	10
	합계	100

자료원 : KOTRA 런던무역관 자체자료

<설문 응답 기업 현황>



응답기업 규모 분포



응답기업 사업분야

□ 설문내용 및 응답결과

○ (Q1. 브렉시트 시 영국 잔류여부)

- 약 84%가 브렉시트가 현실화되어도 영국에 잔류할 것이라고 응답, 약 13%는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응답해 브렉시트와 관계없이 대부분의 진출기업들은 영국에서 사업을 영위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남.
- 잔류 사유는 자사가 영국 판매 법인이어서 영국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사업장 이전의 현실적 어려움, 주된 기능이 정보수집이어서 이전의 필요성이 없음 등의 기타 응답이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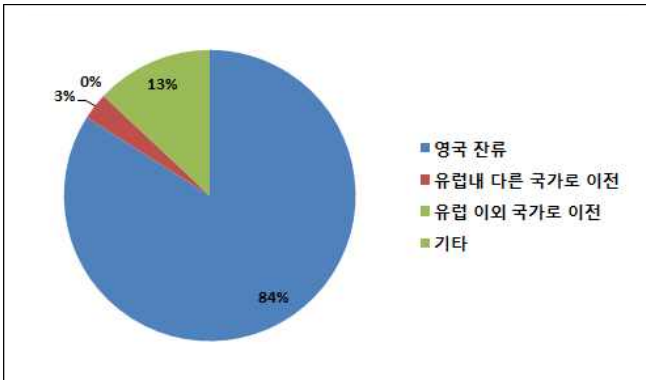
○ (Q2. 브렉시트가 사업에 미치는 영향)

- 브렉시트가 영업활동에 부정적이라는 의견이 71%, 영향 없다는 의견이 29%로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전혀 없음.
- 부정적 응답 사유는 한-EU FTA 미적용에 따른 관세율 인상(가격 경쟁력 악화)과 향후 영국경제 리스크 확대에 따른 파운드화 가치 하락과 수익구조 악화가 대부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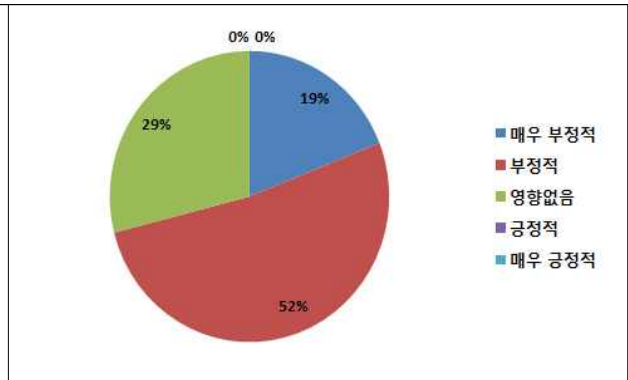
○ (Q3. 신규 양자 FTA체결까지 손실 감내 가능기간)

- 브렉시트 후 한-영 FTA가 새롭게 체결되기 전까지 영업활동 관련 부정적인 영향을 견딜 수 있는 최대 기간이 얼마인지를 묻는 문항에 27%가 1년 이내, 31%가 1년~2년 이내, 19%가 2년~3년, 23%가 3년 이상이라고 응답
- 3년 이상이라고 응답한 기업의 70%는 대기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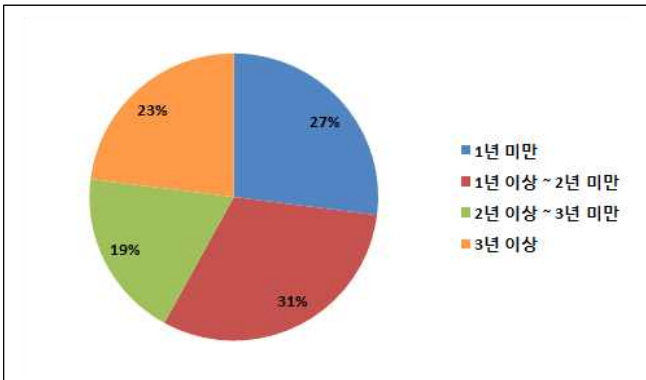
<영국 잔류여부>



<사업에의 영향>



<신규 양자 FTA 체결까지 손실 감내 가능기간>



○ 브렉시트의 업종별 예상효과

- (자동차·부품) 영국시장 성장세 유지를 위해서는 EU역내 한국 수입품목의 가격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며, 한-영 FTA 등 무관세 혜택 확보방안 필요
- (전자·통신) 반도체, 휴대폰, 컴퓨터 등은 WTO 정보기술협정(ITA)으로 무관세 대상이라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이나, 냉장고, 에어컨 등은 일부 관세부담이 예상됨. 브렉시트 후 영국 정부의 정책 변화, 불확실성 증가 등이 업계 활동에 보다 결정적인 영향 미칠 것으로 전망
- (조선·건설) 진출업계는 브렉시트 결정으로 인한 교역에의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
- (에너지·화학) 원유 국내도입에 대한 관세(3%) 혜택에서 일부 영향이 예상되나 크지 않은 것으로 관측됨. 관련 영국법인의 경우 특별한 영향은 없으나 브렉시트 결정으로 사업여건 변화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는 반응

VI 시사점 및 우리기업과 정부의 대응방안

□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및 투자 위축 가능성에 대한 대비

- 브렉시트 현실화로 향후 영국 경제 불확실성 증가에 따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예상
 - 영국 국가신용등급 하향 조정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투자자금 이탈이 가속화 될 수 있음.
- 영국에 진출한 우리기업들 대다수가 판매법인으로 현지에 제조 공장이 없어 브렉시트 이후에도 대부분 영국에 잔류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영국 시장변동성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필요
 - 파운드화 가치 하락 등 환위험 헤징 수단을 강구하고 무역보험 등 개발 필요

영국 경제사회연구소(NIESR) Angus Armstrong 거시경제 담당자, “한국기업들이 영국에 잔류하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은 금융 헤징을 통한 위험 대비이며 이를 통해 파운드화 가치 하락에 따른 수익구조 악화에 대비요망”

□ 영국-EU 교역 감소에 따른 현지진출 우리기업 애로 지원

- 브렉시트로 인한 對영 수출 감소관련 대응 로드맵 필요
 - EU 탈퇴절차*에 소요되는 2년 후부터 한-EU FTA 효과 상실로 인하여 영국에 수출 중인 우리기업들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됨.
 - * 탈퇴를 희망하는 회원국은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라 2년 동안 탈퇴 절차를 밟아야 함
 - 구체적으로 '15년 기준, 對EU 수출이 우리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1%이며, 對EU 수출 중 영국 수출은 15.4%로 높은 점유율을 보여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
 - 영국 진출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브렉시트로 인해 한-영 교역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71%로, 대부분 관세율 인상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와 파운드화 가치 하락으로 인한 수익구조 악화를 우려함.
 -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대응 로드맵을 마련, 세미나를 통해 관련 업계와 정보 공유 필요

□ EU와의 FTA 재협상 및 영국과의 신규 FTA 체결

○ EU와의 FTA 재협상

- 브렉시트가 가결됨에 따라 향후 우리기업들은 영국은 물론 EU시장 접근에서도 일정정도 제약을 받을 수 있음.
- EU단일 시장에서 영국이 제외됨에 따른 이익조정을 반영하기 위해 EU와의 FTA 재협상이 필요
- 우리에게 EU와의 교역이 영국과의 교역에 비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높기 때문에 EU와의 무역관계 재정립 문제가 중요함.

* 2015년 기준 한국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EU가 9.1%, 영국이 1.4%임.

- EU와의 FTA 재협상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영국산 중간재를 사용한 제품의 원산지 규정 처리. Eurostat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영국의 對EU 교역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수출이 58%, 수입이 49%로 영국이 EU산 제품의 가치사슬(value chain)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해당 사안 협상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영국과의 양자 FTA 체결

- 영국과의 관계는 한-영 양자 FTA를 체결해 현재와 유사한 시장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
- 단기적으로는 EU역외국 대상 수출비중이 높은 영국의 입장에서 주요 수입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자체적으로 인하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추후 영국이 무역협상을 체결할 때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영국 경제사회연구소(NISER) Angus Armstrong, “한국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는 영국과의 FTA 협상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시작하는 것이며, 영국의 입장에서는 EU뿐 아니라 주요 교역상대국 모두와 경제관계를 재정립해야 하는 만큼 FTA 협상에서 선두를 차지하는 것이 중요.”

- 설문조사 결과 브렉시트로 초래되는 영업활동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견딜 수 있는 기간이 2년 미만이라는 응답이 58%에 달해 영국과의 FTA협상을 서두를 필요가 있음.

□ 타 EU회원국들의 EU탈퇴 및 시장불안정 상황 예측 요망

- 브렉시트가 다른 회원국들의 EU 탈퇴여론을 부추겨 EU 통합이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짐.
 - EU 역내 난민유입의 급증으로 인한 회원국간 재정분담 문제, 쟁쟁 조약을 이용한 난민위장 입국자의 테러 소행 등으로 EU 통합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는 상황
 - 더불어 일부 EU 회원국 내에서 극우세력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어 경제 상황 등에 불만인 여타 회원국들의 EU 탈퇴여론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EU 탈퇴를 희망하는 역내 여론>

- 이탈리아 및 프랑스 : EU 탈퇴를 위한 국민투표 시행 희망(Ipsos Mori-영국 여론조사 기업)
- 체코 : 보후슬라프 소보트카(Bohuslav Sobotka) 체코 총리는 브렉시트 발생 시 자국 역시 근시일내에 EU 탈퇴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으며 (유럽 전문 일간지 Politico, '16.02.23 기사), 체코 국민의 62%가 탈퇴를 찬성(Telegraph '16. 2월 보도)

- EU통합 붕괴시 세계 단일 최대 규모의 EU 단일시장이 분열되고, EU 경제 및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급증하므로 이에 대한 사전 대비 필요
 - EU의 주요 교역국을 비롯 전세계의 무역 규제 동향 및 금융시장 변동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시장 교란요인을 사전에 포착하려는 노력 필요
 - 경제 위기 상황 발생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기업 차원의 환위험 헤징 수단 개발이 필요하고, 특히 환율변동에 취약한 중소기업들에게 관련 정보 제공과 정기적인 교육 필요
- EU관계 전문가 양성을 통한 중장기적 대비책 마련
 - 정부 차원에서 EU 통합과 EU-영국 관계에 관한 전문 인력을 양성, EU 동향을 보다 면밀하게 살피고,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EU 시장 불안정 상황 발생시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둘 필요가 있음.

□ 기타 : 주재원 비자발급 관련 변화 주의

- 영국정부의 국경통제 강화는 주재원 비자발급 관련 변화 초래 가능
 - 향후 변경되는 영국 이민법에 대한 설명회 개최 및 정보 공유 필요



작성자

- ◆ 런던 무역관 박은경 차장
- ◆ 브뤼셀 무역관 김도연 대리
- ◆ 파리 무역관 김영호 차장
- ◆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박소영 과장
- ◆ 유럽지역본부 이수영 차장
- ◆ 구미팀 안 령 사원
강지숙 사원

Global Market Report 16-032

2016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와 시사점

발행인 김재홍
발행처 KOTRA
발행일 2016년 6월 24일
주소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13
(06792)
전화 02) 1600-7119(대표)
홈페이지 www.kotra.or.kr

ISBN : 979-11-87219-66-8 (95320)

Copyright © 2016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Global Market Report

2016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와 시사점
